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수립 포럼

2022. 12. 15. (목) 14:00-18:00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포럼

2022. 12. 15.(목) 14:00-18:00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시 간	회의 내용		
13:30-14:00	등 록		
14:00	개회	사회자	
14:00-14:05	축사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14:05-14:10		이형환(한국문화정책학회 회장)	
14:10-14:30	기조발제	정보람(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향	
14:30-16:00	<제1회의> 공정한 문화생태계와 자유로운 문화창조		
	좌장	도승연(광운대학교)	
14:30-16:00	1-1	발표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모두를 위한 문화실현"의 정책적 제언
		토론	손미정(예술의전당) 주호진(가톨릭관동대)
	1-2	발표	서우석(서울시립대),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창작/참여 분야 제언"
		토론	김승일(중앙대학교) 이윤정(대한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
16:00-16:20	휴 식		
16:20-17:50	<제2회의> 전통문화의 확산과 지역문화의 지속가능 발전		
	좌장	이형환(한국문화정책학회장)	
	2-1	발표	채경진(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정책 방향"
		토론	문주석(국립국악원) 조순자(성신여자대학교) 최연수(한국공예산업연구소)
	2-2	발표	정창호(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추진 방향"
		토론	손도연(중도일보) 송은옥(한국문화원연합회)

【기조발제】

-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향 7
정보람(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 발표】

- ◆ “모두를 위한 문화실현”의 정책적 제언 25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 토론】

- 손미정(예술의전당) 37
- 주효진(가톨릭관동대) 43

【1-2 발표】

-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창작/참여 분야 제안 47
서우석(서울시립대)

【1-2 토론】

- 김승일(중앙대학교) 63
- 이윤정(대한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 67

【2-1 발표】

- ◆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정책 방향 71
 채경진(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1 토론】

- 문주석(국립국악원) 89
- 조순자(성신여자대학교) 93
- 최연수(한국공예산업연구소) 99

【2-2 발표】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추진 방향 105
 정창호(한국문화예술위원회)

【2-2 토론】

- 손도연(중도일보) 125
- 송은옥(한국문화원연합회) 135

【기조발제】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

2022. 12. 5.

정보람 부연구위원(brj@kcti.re.kr)

차례

- I.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개요 및 평가
- II. 환경변화 대응 문화정책 과제
- III. 국외 문화분야 중장기 계획 검토
- IV.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시

I.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개요 및 평가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개요 및 평가

문화기본법 근거,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국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의 가치와 위상 제고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2014년 제정)에 근거한 계획으로, 문화권을 국민의 기본권리로 법률로 보장하는데 의의

<문화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개요 및 평가



기본계획의 범위

장르별/기능별 광범위한 계획

기본계획에는 문화정책 기본방향, 법제도 마련, 기반조성, 관련 시책, 인력양성 및 교육, 정책조사 및 연구, 자원조달, 시설관리, 지역격차 해소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

8조 3항의 4는 관련 문화정책에 대한 내용인데, 관련 문화정책은 문화정책 전 영역

<문화기본법>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생략)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 및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문화·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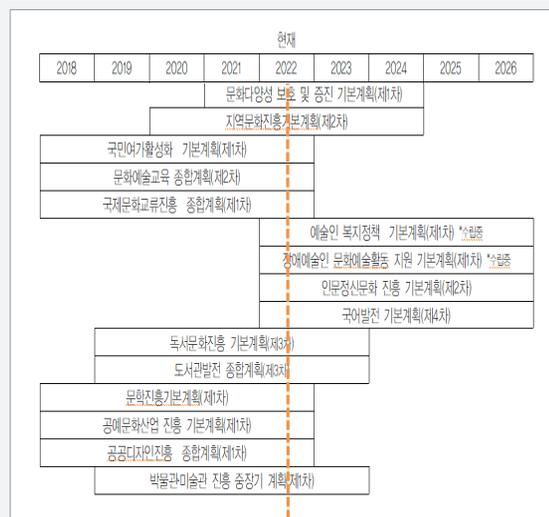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개요 및 평가



문화정책 관련 법정계획

정책영역별 17개, 이 중 15개 계획 발표

문화정책(문화산업, 체육, 관광 분야 제외) 관련 된 법정 계획은 17개(문화진흥기본계획 제외) 이 중 15개의 기본계획/종합계획이 수립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개요 및 평가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전략체계

■ 2015년 7월,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 수립

5개 정책목표, 18개 추진과제, 58개 실천과제 구성

‘문화가 융성한 부강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 ① 문화가 있는 삶,
- ②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 ③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 ④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 ⑤ 문화진흥 기반구축

기대효과는

- ① 문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 ② 문화가 바탕이 되는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 ③ 세계와 호흡하는 문화강국 이미지 강화

비전	문화가 융성한 부강한 대한민국	
정책 목표	문화가 있는 삶	1.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2.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 3. 대상별 맞춤형 문화참여 기회 확대 4.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복지 강화 5. 참여·재감영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6.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7.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브랜드 정립 8.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확대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9. 문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10. 국제적 국제 문화교류 강화 11. 지속가능한 신인류 창출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12. 남북 문화교류협력 추진체계 구축 13. 민족 통일성 회복을 위한 교류 지원
	문화진흥 기반구축	14. 문화재정 확충 및 재정운용 효율화 15. 문화예술계 비정상의 정상화 16. 문화예술 창작기반 구축 17. 문화인력 육성 및 연구 강화 18. 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및 확충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개요 및 평가

1차계획의 체계성 및 실효성

■ 포괄적인 내용, 다만 상위계획으로서 위상 부족

다른 계획과의 관계와 위상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 기본법으로서 문화정책 전반의 방향설정 보다는 이미 추진중인 정책과제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한계

■ 문화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방향 제시 부족

국정과제나 개별계획의 사업목록의 성격이 강하고 문화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방향제시 기능은 미흡

거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정책의 발전방향과 원칙, 핵심 개혁과제 등을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개별계획에서는 기본계획의 방향성에 맞춰 장르별/기능별 정책을 수립하도록 계획의 성격 명확히할 필요

비전	문화가 융성한 부강한 대한민국	
정책 목표	문화가 있는 삶	1.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2.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 3. 대상별 맞춤형 문화참여 기회 확대 4.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복지 강화 5. 참여·재감영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6.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7.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브랜드 정립 8.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확대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9. 문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10. 국제적 국제 문화교류 강화 11. 지속가능한 신인류 창출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12. 남북 문화교류협력 추진체계 구축 13. 민족 통일성 회복을 위한 교류 지원
	문화진흥 기반구축	14. 문화재정 확충 및 재정운용 효율화 15. 문화예술계 비정상의 정상화 16. 문화예술 창작기반 구축 17. 문화인력 육성 및 연구 강화 18. 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및 확충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개요 및 평가



1차계획의 성과지표 달성도

■ 문화향유, 문화복지, 국제교류 목표치 근접

문화예술관람률 목표치 초과달성
문화복지(누리카드) 목표치 근접
한국문화원 수, 세종학당수 목표치 근접

■ 문화예술교육, 문화기반시설 목표달성 미흡

문화예술교육참여자, 문화기반시설 수는 미흡
생활문화 참여율은 성과추정 불가능

<문화진흥기본계획 성과지표 달성 현황>

구분	2014년	2019년 (목표)	2019년 (실적)	2021년 (실적)	목표달 성 여부	
문화향유	문화예술교육참여자수	267만명	380만명	272만명	273만명	-
	생활문화 참여율	5%	10%			
	문화기반시설수	2,519개	3,375개	3,017개	3,087개	-
	문화예술관람률	71.3%	80%	81.8%	33.6%	○
	문화복지수혜자수 (누리카드)	144만명	200만명	163만명	198만명	△
국제교류	한국문화원수	28개소	34개소	32개소	33개소	△
	세종학당수	130개소	180개소	179개소	234개소	△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개요 및 평가



1차계획의 추진과제 평가

■ (긍정평가) 문화복지 강화, 국가브랜드 제고

문화가 있는 날, 대표브랜드 사업을 활성화하고
인문프로그램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등 생
활 속 문화친화적 환경을 조성,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인정받아 국가이
미지가 지속 상승한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됨

■ (부정평가) 남북 문화교류

남북 문화교류, 민족동질성 회복(남북 공동문화
유산 발굴·보존 내용)는 대외변수에 수동적 특징
외부환경에 의해 계획이행이 대부분 불가능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됨

■ (지속추진) 문화인력육성 및 문화정책 연구

<문화진흥기본계획 성과지표 달성 현황>

구분	긍정 (4+5)	부정 (1+2)	평균값	지속추진필 요성 (단위 횟수)
1.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39%	22%	3.2	7
2.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	39%	17%	3.3	5
3. 대상별 맞춤형 문화참여 기회 확대	30%	13%	3.2	4
4.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복지 강화	70%	9%	3.7	7
5. 참여·체험형 문화향유 환경 조성	39%	17%	3.3	7
6.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4%	17%	2.9	5
7.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브랜드 정립	43%	9%	3.4	6
8.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확대	22%	13%	3.1	2
9.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61%	4%	3.6	2
10. 호혜적 국제 문화교류 강화	22%	17%	3.0	5
11. 지속가능한 신산업 창출	52%	13%	3.4	1
12. 남북 문화교류협력 추진체계 구축	0%	87%	2.0	2
13.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지원	0%	100%	1.8	2
14. 문화재정 확충 및 재정운용 효율화	13%	48%	2.6	5
15. 문화예술계 비정상의 정상화	30%	43%	2.8	0
16. 문화예술 창작기반 구축	39%	4%	3.3	6
17. 문화인력 육성 및 연구강화	22%	22%	3.0	10
18. 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및 확충	48%	13%	3.3	2

주: n=23, 단위 :%, 점(5점 평균)

II. 환경변화 대응 문화정책 과제

II 환경변화 대응 문화정책 과제

정치적 요인(Political Factor)

■ **새정부 출범, 국정원칙 : 국익, 공정, 실용, 상식**

2022년 5월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의 국정운영원칙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제시

■ **문화관련 전략 :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의 국정전략을 포함

문화정책과 관련한 국정과제는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한 윤석열정부 국정운영의 실행도 마련

정치 행정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경제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사회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미래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외교 안보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지방 시대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환경변화 대응 문화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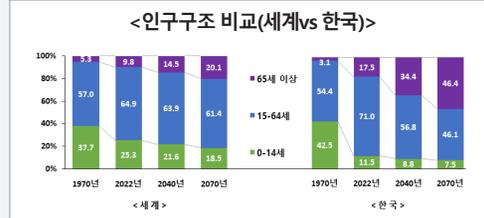
사회적 요인(Social Factor)

인구문제, 지방소멸 위기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생산연령인구가 2022년 71.0%, 2040년 56.8%,
 2070년에는 46.1%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낮은 삶의 질

OECD 국가 대비,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심각
 사회문제와 사회갈등 심화, 낮은 삶의 질 지속



<사회 주요지표(OECD 국가)>

주요지표	한국	OECD 평균
지니계수	0.345(9위/36개국)	0.316
상대적 빈곤률	16.7%(4위/38개국)	12.3%
66세 이상 노인빈곤률	40.4%(1위/37개국)	14.3%
BLI(Better Life Index) 지수	5.9(24위/40개국)	6.5
- 사회적 연결	0.0(40위/40개국)	-
- 환경의 질	2.4(40위/40개국)	-
지역 간 국내 총생산(GDP)격차	2위 (미국) 한국 > 프랑스 순	

주 1) 지니계수는 인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비율을 비교한 결과로 완전 평등의 경우 0에서 완전 불평등의 경우 1 사이임
 2) 상대적 빈곤률은 전체 인구 중 중위 소득의 50% 이하를 차지하는 비율임
 3) 자료는 2022년 8월 기준 가장 최신 데이터임

환경변화 대응 문화정책 과제



경제적 요인(Economic Factor)

슬로우플레이션(성장둔화+물가상승)

전 세계는 슬로우플레이션(Slowflation, 성장둔화
 +물가상승)이 빠르게 확대

일상회복 추진 : 대면업종 중심 서비스업 회복

코로나19 위기에 최대 -28.1%(전년 동분기대비)
 로 크게 감소했던 오락·문화 분야의 가계소비

백신접종 확대 시기인 2021년 2/4분기를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 회복

2022년 2/4분기에는 전 분야 통틀어 가장 큰 폭
 의 가계소비지출 증가세

<가계소비지출 증감률(2020년~2022년 2/4분기)>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구분	201 4	202 4	203 4	204 4	21.1 4	21.2 4	21.3 4	21.4 4	22.1 4	22.2 4
식품·비주류음료	-60	201	187	151	73	20	57	23	09	-18
주류·담배	105	95	107	78	60	16	53	37	-06	-30
의류·신발	-42	-58	-136	-119	93	-42	100	122	57	125
주거·수도·광열	-280	69	67	23	68	78	25	-02	23	-33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8	21.4	198	101	141	-70	72	1.1	-10.4	-9.4
보건	-11.6	75	128	99	-45	106	32	18	75	25
교통	99	246	-12.4	-5.4	-29	-0.4	58	-32	28	118
통신	43	-3.4	12	-6.5	15	15	30	7.1	13	36
오락·문화	05	-21.0	-28.1	-20.8	-9.4	4.1	37	11.0	4.7	19.8
교육	-23.6	-29.4	-136	-188	80	31.1	69	206	135	11.1
음식·숙박	-	26.3	-5.0	-6.6	-	-2.4	33	52	170	139
가정용품·서비스	-11.2	18	21	-2.3	-5.6	0.2	19	70	40	4.4

자료 : 통계청(국민도)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

환경변화 대응 문화정책 과제



기술적 요인(Technological Fa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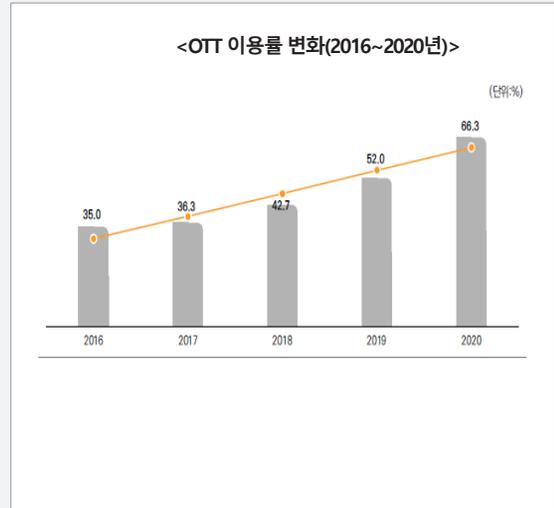
■ 문화 표현 및 향유 방식의 융합(convergence)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삶의 모든 방식에 언택트(비대면) 방식 일상화

문화예술 또한 3차원 홀로그램, 인공지능, VR 등 새로운 방식의 문화접촉 비즈니스 확대

■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 미디어 소비

스마트폰을 통한 콘텐츠 소비(개인화)와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 이용은 전 연령대에서 증가



환경변화 대응 문화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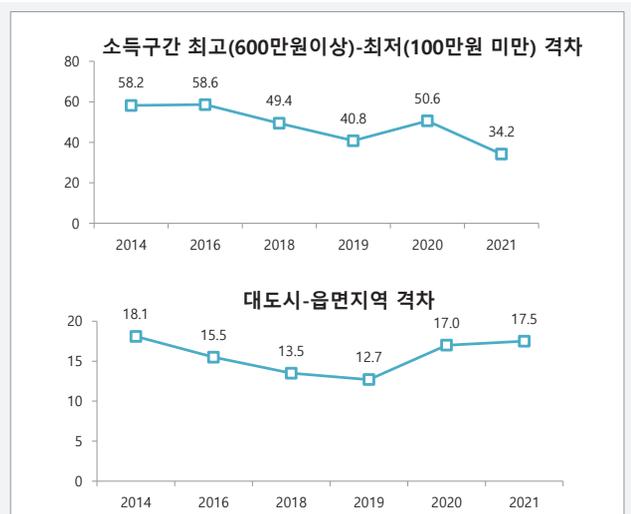


문화향유 격차

■ 소득별/지역규모별 문화소비 격차 심화

소득계층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는 완화되어왔으나,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50.6%p로 심화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도 완화되어 왔으나, 2020년 17.0%p, 2021년 17.5%p로 심화



환경변화 대응 문화정책 과제



문화적 욕구 및 트렌드

■ 문화예술 참여 욕구 불충족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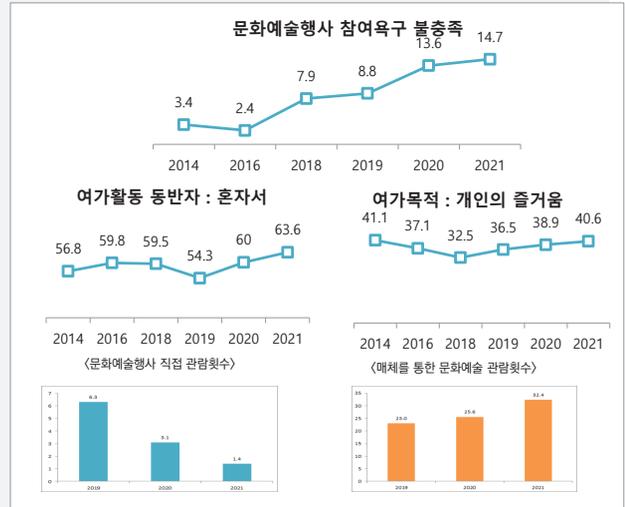
문화예술행사 참여의향 대비 참여경험 차이 지속 확대(코로나 이슈 무관)

■ 문화소비 개인화, 혼자하는 여가문화 확산

여가활동은 혼자서 즐기는 사람이 가장 많고, 개인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추세

■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 접촉 확대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 줄어 들고, OTT 서비스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비대면 문화예술 향유 증가세



환경변화 대응 문화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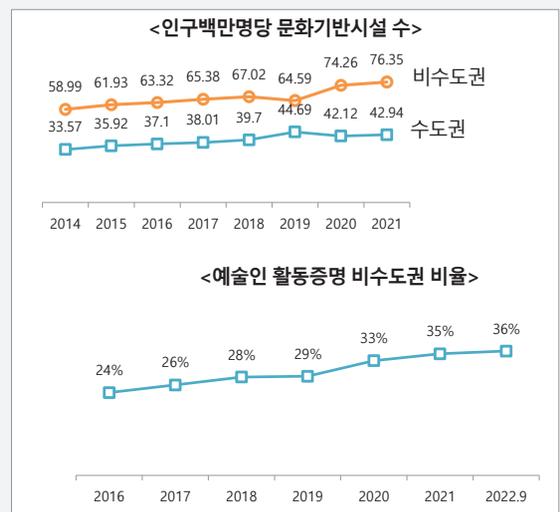
문화서비스 공급기반

■ 인구대비 문화기반시설 지방 우세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에 문화시설의 36.2%가 분포하여 수도권 집중화
다만, 인구대비 문화기반시설은 수도권 이외 지방(비수도권)이 우세

■ 예술인활동 수도권 집중화, 다만 비수도권 증가세

2022년 9월기준 예술인 활동증명 누적합계는 150,187명으로 전체의 64.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수도권 집중 완화 추세



II 환경변화 대응 문화정책 과제



환경변화 대응 문화정책 방향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

<table border="1"> <tr> <td>정치</td> <td>새정부 출범(국익, 공정, 실용 상식) 민간주도 성장 추구 일상회복 기조 확대 국제정세 급변화(탈세계화, 신냉전)</td> </tr> <tr> <td>사회</td> <td>인구문제(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지방 소멸 위기, 귀농귀촌 현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낮은 삶의 질과 정서적 문제 심화</td> </tr> <tr> <td>경제</td> <td>경기회복세 약화,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서비스 분야 소비심리 회복 노동시장 유연화</td> </tr> <tr> <td>기술</td> <td>기술결함 가속화(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적용 비즈니스 확대 디지털/정보 격차 심화</td> </tr> <tr> <td>환경</td> <td>기후변화 대응 노력(2050 탄소중립) 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확산 친환경적 실천 관심 확대</td> </tr> </table>	정치	새정부 출범(국익, 공정, 실용 상식) 민간주도 성장 추구 일상회복 기조 확대 국제정세 급변화(탈세계화, 신냉전)	사회	인구문제(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지방 소멸 위기, 귀농귀촌 현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낮은 삶의 질과 정서적 문제 심화	경제	경기회복세 약화,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서비스 분야 소비심리 회복 노동시장 유연화	기술	기술결함 가속화(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적용 비즈니스 확대 디지털/정보 격차 심화	환경	기후변화 대응 노력(2050 탄소중립) 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확산 친환경적 실천 관심 확대	<p>문화정책 여건</p> <p>문화소비 위축현상 회복 소득별/지역별 문화소비 격차 지속 문화기반시설 및 인력 수도권집중 완화 문화예술 참여욕구 불충족 심화 노년기 적극적 문화참여 혼자하는 여가문화, 취향맞춤형 문화소비 시간민감성 확대 국제사회에서 한국 대중문화 인기 지속</p>	<p>문화 정책 대응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생활 및 혜택에 대한 참여 보장 ○ 문화의 역량으로 지역소멸 대응 ○ 사회적 연결을 위한 문화의 역할 확대 ○ 문화적 고유성·정체성 보호·증진 ○ 디지털환경, 친환경 등 글로벌 이슈 대응
정치	새정부 출범(국익, 공정, 실용 상식) 민간주도 성장 추구 일상회복 기조 확대 국제정세 급변화(탈세계화, 신냉전)											
사회	인구문제(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지방 소멸 위기, 귀농귀촌 현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낮은 삶의 질과 정서적 문제 심화											
경제	경기회복세 약화,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서비스 분야 소비심리 회복 노동시장 유연화											
기술	기술결함 가속화(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적용 비즈니스 확대 디지털/정보 격차 심화											
환경	기후변화 대응 노력(2050 탄소중립) 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확산 친환경적 실천 관심 확대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



III. 국외 문화분야 중장기 계획 검토

III 국외 문화분야 중장기 계획 검토



유럽연합 : Creative Europe

- (이전) 문화·창조산업의 경제적 가치→
- (최근) 문화를 통한 사회포용 및 혁신 강조

Creative Europe 2021-2027은 문화 및 창의 부문을 지원하는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으로써, 기존의 국가 경제, 문화 등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략과 방법을 통해 문화와 창의성을 강조

주요 추진분야: 문화 33%, 미디어 58%,
+ 융합 9%(새롭게 분류)

국가, 문화장르 등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원
글로벌 이슈대응 문화예술 접목 협력체계 강조

	Creative Europe 2014-2020	Creative Europe 2021-2027
계획 수립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국가적인 문화예술 공유의 필요성 강조 • 미래경제 원동력인 문화·창조산업의 역할 부상 	기존의 국가경제, 문화 등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략과 방법을 통해 문화와 창의성을 강조
비전	유럽 지역의 문화·창조산업 분야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도모	초국가적인 문화 및 창의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목적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사업모델 및 노하우 발전 • 디지털 시대에의 적응 • 새로운 문화산업 소비자층 확보 • 예술분야 종사자들의 국제적 경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적 접근 및 참여 증대 •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들과 그들의 문화를 통해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하고 포용력을 강화시키는 사회통합성 강조 • 문화 및 창의 부문이 보다 친환경적인 활동들을 함께 만들고, 이를 계속 채택, 보급, 장려에 기여 • 신기술 활용,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유럽 내 초국가적인 창의 활동 및 역량 제고
지원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 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 미디어 • 융합영역(문화+미디어)

III 국외 문화분야 중장기 계획 검토



영국 : Let's Create Strategy 2020-2030

- (이전) 예술 자체의 진흥 및 확산 중심→
- (최근) 문화의 사회적 역할 확장

Let's Create는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의 진흥과 영국의 지역사회를 어떻게 지원할 지에 대한 방안들을 담은 10개년 전략

국가 및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번영시키기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조

	Great Art and Culture for Everyone 2010-2020	Let's Create Strategy 2020-2030
계획 수립 배경	문화 예술의 '수월성(excellence)'을 강조하고 창조 영역에서 전문성을 지닌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작품 생산 지원을 중요시함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의 진흥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어떻게 지원할 지에 대한 방안 구상
비전	모두를 위한 훌륭한 예술과 문화 실현	국가 및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번영시키는 데 있어 문화의 역할을 증진
목적 (투자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월한 예술 창작에 대한 지원 강화 • 예술에 대한 전 국민의 향유 기회 증진 • 예술생태계 보존과 진흥을 위한 지원 •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예술계 리더와 전문인력 양성 •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문화예술단체의 야심, 헌신 • 향후 10년의 도전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역동성 • 환경적 책임에 대한 접근 방식 주도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 • 조직과 개인,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문화에 반영되어야 할 다양성

III 국외 문화분야 중장기 계획 검토



미국 : Strategic Plan

- (이전) 문화권, 문화향유 기회 강조→
- (최근) 국가/지역사회의 회복·웰빙에 문화의 역할

Strategic Plan Fiscal Year(FY)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건강, 국가 경제 등 삶의 파괴로부터의 회복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예술 및 문화를 지원하는 계획

예술이 사람과 지역사회의 웰빙과 회복력을 강화, 증진하는 것(비전)

	Strategic Plan FY 2018-2022	Strategic Plan FY 2022-2026
계획 수립 배경	예술을 통해 모든 미국인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고, 복잡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예술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을 기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민, 그리고 국가가 겪은 문제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 예술과 문화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
비전	모든 미국인이 예술 참여로 향유 혜택을 받고 모든 공동체가 예술을 통한 열망과 성취를 이뤄냄	예술이 사람과 지역사회의 웰빙과 회복력을 강화, 증진하는 것
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민의 예술 활동과 전통을 존중하고 지원함 • 전국의 다양한 형태의 우수한 예술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접근 기회를 제공함 • 예술 공헌에 대한 대중들의 지식 및 이해를 증진시킴 • NEA 조직의 우수성을 통해 조직 임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들이 예술/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 • 사람 및 지역사회의 웰빙과 회복력을 증진하는 전략들을 예술과 통합함 • 지식 공유, 도구, 자원 및 증거 기반 활동들을 통해 예술 분야의 역량과 기반 시설을 구축함 • 기관의 사명을 지지하기 위한 모범적인 활동들을 채택하고 추구함



IV.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시

IV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시



기본방향

■ 정책 패러다임 : 문화자체 진흥(Text) → 문화의 역할/기능 강화(Context)

구분	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제안)
계획 구성	국정과제 및 개별계획 사업목록화	문화권 보장을 위한 전략적 방향 제시
	국정과제에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목록의 성격	문화권 보장을 위한 발전방향과(방향성) 핵심 과제에 중점
정책 방향	문화진흥(문화융성) 중심 문화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인프라, 교육, 국제교류, 조사·연구 구성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의 역할 강화 글로벌의제, 누적된 사회문제 대응 문화의 역할 중심, 협력 체계 강화

IV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시



기본계획 전략체계

■ 정책 패러다임 : 문화자체 진흥(Text) → 문화의 역할/기능 강화(Context)

구분	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제안)
비전	문화가 융성한 부강한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문화매력국가
핵심가치	(없음)	다양성(공존), 연계성(협력), 창의성(혁신)
전략과제	1. 문화가 있는 삶 2.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3.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4.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5. 문화진흥 기반 구축	1. 모두를 위한 문화실현 2. 개인과 지역활력 증진 전략을 문화예술과 통합 3. 창의적인 활동과 문화산업 성장 기반 조성 4. 인류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의 역할 강화 5. 증거기반 문화정책 및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IV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시

비전 및 전략과제의 의미

■비전 :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문화매력국가

모두를 위한	<p>개개인의 자유로운 문화누림, 창작활동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 시간, 거리, 장애 등에 따른 문화누림 제약 해소, 창작의 자율성·다양성 보장
모두에 의한	<p>문화를 모든 정책 및 전략을 관통하는 핵심가치 위상으로 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활력, 창의·혁신에 문화를 필수로 인식, 중앙(타부처)/지자체 협력과 연계 강조
문화매력국가	<p>국력을 문화로 완성, K-Culture의 번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의 역할 강화

IV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시

비전 및 전략과제의 의미

■5대 전략과제 구성 예시

1. 모두를 위한 문화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생애주기별 문화누림 기회 보장,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의 문화누림 기회 확대 • 수도권-지방간 문화격차해소
2. 개인과 지역활력 증진 전략을 문화예술과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웰빙, 행복, 치유에 방점을 둔 문화지원 확대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지역정책 및 계획에 문화부문 포함 • 문화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3. 창의적인 활동과 문화산업 성장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창작활동 보장, 창작자 이동성 증진 • 전통문화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국제교류 기회 보장 • 대한민국의 국격제고를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4. 인류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의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환경, 기술발전, 친환경 실천, 안전한 여가 대응 문화생태계 지원 • 문화 정체성·고유성 보호·증진 •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 창작자·생산자·유통자로서 양성평등 촉진
5. 중저기반 문화정책 및 서비스 자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분야 연구, 통계 및 정보관리 강화 • 문화재정 효율성 제고 및 문예기금 안정화 추진 • 문화정책 전달체계 개선

감사합니다.

정보람 부연구위원(brij@kcti.re.kr)

[1-1 발표]

“모두를 위한 문화실현”의
정책적 제언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12. 15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포럼

‘모두를 위한 문화실현’ 정책적 제언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



모두를 위한 문화실현

Contents

1. 모두를 위한 문화_1
2. 문화정책의 실현_7

1. 모두를 위한 문화

1

1-1. 문화와 문화권 개념

- 문화권은 물질적 차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뛰어넘어 ‘문화적 차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 를 말함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문화권**
- 모든 국민은 문화활동에 대해 향유에서 창조적 활동에 이르기 까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권과 의무 지위체계에서 향유자와 창작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됨
-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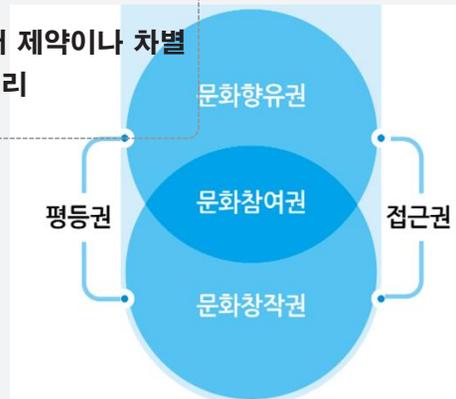


1. 모두를 위한 문화

2

1-2. 문화권의 하위 개념

- **문화향유권/문화참여권** : 국민 개인이 문화활동에 참여하거나 향유하며,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건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 **문화창작권** : 문화생태계의 관련 종사자들이 창작활동이나 서비스 생산활동에서 적절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고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 **문화평등권/문화접근권** : 모든 국민은 문화활동에서 제약이나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1. 모두를 위한 문화

3

1-3. 문화권 보장을 위한 공공문화서비스

- 문화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문화향유가 필요한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관광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의미.
- 공공정책으로서 문화 개념을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수요자의 요구가 중요함
- ‘문화적 결함을 가진 문화적 약자나 문화적 낙오자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에서 확장적 개념으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문화생활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려는 요구에 대해 국가 또는 공공이 제공하는 것’으로 접근
- 문화서비스의 사회적 특성은, 타인과의 교류를 거부하고 개인화되어가는 풍조속에서 관계, 소통,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됨을 강조함
- 결국,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로서 문화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점

1. 모두를 위한 문화

4

1-4. 문화안전망 개념

-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문화권에 기반하여 모든 국민이 문화 향유에서 창조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문화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기준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
- 문화안전망 부재시 예상되는 문제상황
 - **사회적 기반이 취약해서 발생하는 상황(일상)** : 사회의 기반이 취약해서 국민들의 문화권에 대한 최소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는 안전(safety)의 문제 상황
 - **외부환경이나 재해로 부터 발생하는 위기상황(재난)** : 외부 환경적인 변화나 재해로 부터 발생하는 위기상황 등(예. 지진,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부터 안전(security)의 문제
 - **불안정한 상황이나 예측불가능한 상황(안정성)** :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이 불안정하고 그 기회와 환경을 예측할 수 없거나, 창작자나 관련 종사자들이 그 활동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지 못해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안정성(stability)의 문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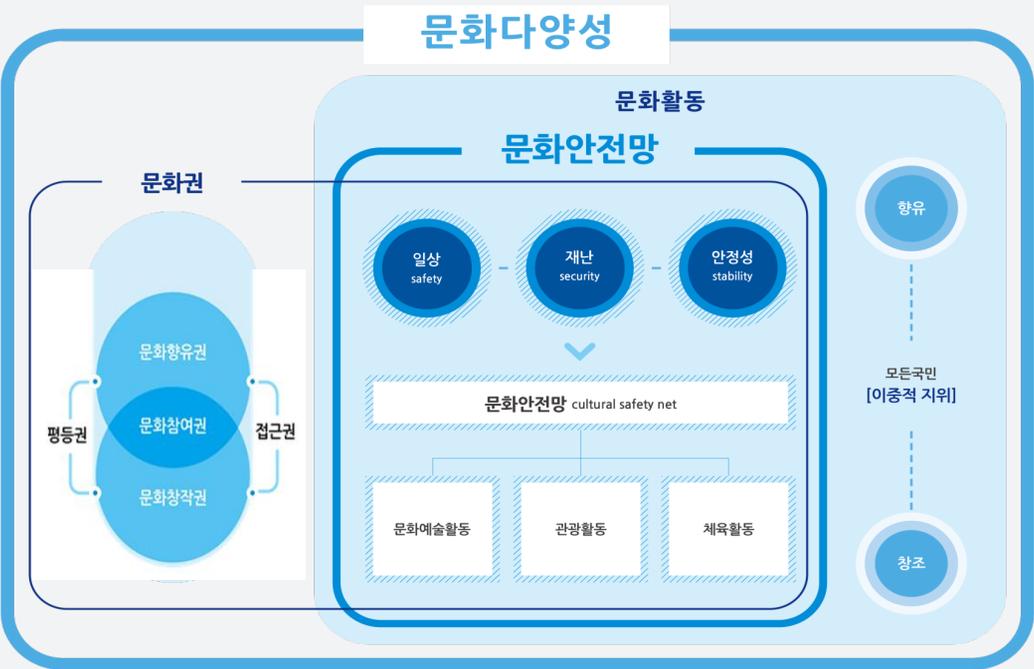
1.모두를 위한 문화 5

1-5.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 국가최소기준은 국민생활환경의 기준으로, 한 나라 전체 국민의 생활복지상 필수불가결한 최소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의미. 국가최소기준의 목적은 현재 국민생활 수준이 어느 위치에 있고, 그것이 국민의 기대수준과 어느 정도의 격차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 취해져야 할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임
- 문화안전망의 국가최소기준은 “문화권에 기반한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로 이해됨. **“이 정도는 누려야 한다”**

- 그러나, 문화안전망의 개념은 **문화다양성**을 반영한 특성화 영역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지역 특성화를 반영한 지역 적정기준 고려
 - 정량적 지표와 함께 정성적인 측면도 고려

1.모두를 위한 문화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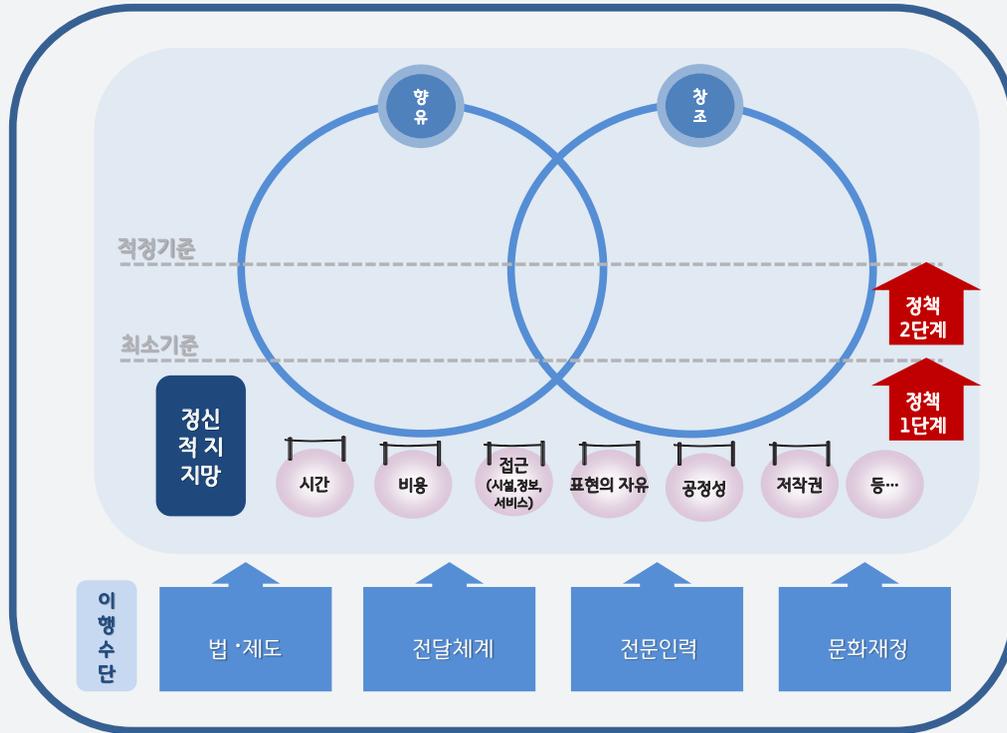


*자료: 윤소영(2020).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문화활동과 문화권에 근거한 문화안전망의 개념과 범위]

2. 문화정책의 실현

7



*자료: 윤소영(2020),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 문화정책의 실현

8

2-1. 정책제안

영역	정책 제안
시간보장	- 일-여가균형 정책 (Work-Leisure Balance; WLB ver.2) - 시간부족의 ‘문화소외계층’ 발굴과 지원
비용지원	- 문화서비스-경제-고용의 Golden Triangle - 문화비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및 확대 추진
문화공간/지역	- 문화시설 서비스 거리 최소기준과 적정기준 - 문화매력도와 문화활력지역으로 패러다임 전환
정보접근	- 온·오프라인 문화서비스 환경 균형적 제공 - 온라인 환경 접근 확대 -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환경 구축
서비스접근	- 문화경력 (Culture Career) 관리 지원 - 문화로 치유 사업 - 생애주기별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문화정책의 실현

9

2-2. 정책제안

(예. 일-여가균형(WLB Ver.2) 정책)

〈일과 삶의 균형의 스펙트럼〉				
정책명	주무부처	핵심가치	주요내용	관련법률
노숙과 사측의 균형	고용노동부	최소한의 권리	- 노동시간 - 소극적 휴식권	근로기준법
일과 가족의 균형	여성가족부	모성보호	- 가족시간 - 모성보호, 육아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과 여가의 균형	문화체육관광부	삶의 풍요	- 자유시간 - 적극적 여가권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예. 문화소외계층 범위)

- 경제적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등
- 사회적 소외계층 : 장애인, 노인, 재활원 및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등
- 지리적 소외계층 : 농어촌, 도서(섬), 산간벽지 및 공단지역 주민 등
- 시간 소외계층은?

2. 문화정책의 실현

10

2-2. 정책제안(예. 문화비 소득공제)

• 문화비 소득공제 현실화

-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자 범위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보장과 문화참여 권 증진 및 관련 시장 활성화에 기여
- 문화비 소득공제가 실시(' 18.07.01)되고 있으나, 문화비 소득공제가 급여소득의 상한(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을 제한하고 있어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는 대상자들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도서·공연비(' 18.07.0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19.07.01~), 신문구독료(' 21.01.01~)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그 대상적 범위 확대를 고려할 필요 있음

※ 문화비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 신문 구독을 위해 사용한 금액 (이하 "문화비") 추가공제(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2.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구조

11

2-2. 정책제안(예. 문화시설 최소기준과 적정기준 설정)

- **최소기준** : 공공문화시설의 문화서비스 거리 (일정수의 주거인구가 문화시설 서비스 경험을 위해 도달해야 하는 최소거리, 인구 백분위 90% 기준)
- 단, 전국 평균의 최소기준과는 달리 각 지자체 별로 문화서비스 거리는 달라질 수 있음

<표> 문화기본시설 서비스거리 최소기준(안)

시설유형	거리기준(km)	시간기준(차량, 분)
도서관	3.2	7.7
박물관	7.3	17.5
문화회관	8.6	20.6
지방문화원	10.0	23.9
미술관	17.4	41.7
생활문화센터	22.0	52.7
지역문화재단	23.5	56.4
문화의집	31.4	75.2

* 차량속도 29km/h 적용

- **적정기준** : 지역단위 문화시설의 융합적 기능과 복합서비스 제공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융합하는 방안, 시설통합화, 프로그램 통합, 문화적 복합공간 제공 등)
- **적정기준** : 문화활동 공유지와 다양한 생활권 문화공간 확보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속 문화공간과 네트워크 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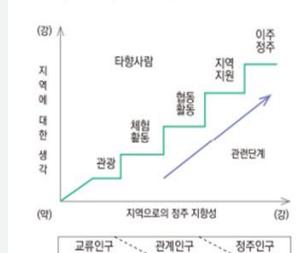
2.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구조

12

2-2. 정책제안(예. 문화매력도와 문화활력지역)

- 지역의 정주민구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관계인구나 생활인구** 개념으로 접근

[그림 4-1] 교류-관계-정주민구의 단계별 위치



- **인구소멸지역에서 문화활력지역으로 전환**
 - 인구문제에 대해 문제해결형 문화적 접근 방법
 - 문화매력도를 위한 지역역량 개발, 문화활력지수 개발, 문화활력지역 지정
 - 지역별로 문화경쟁력 차별화 지원방식

2.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구조

13

2-2. 정책제안(예. 문화경력 관리)

여가경력 개발의 단계

- 3단계 (전성기)**
 - 여가활동의 전문성 증대
 - 여가전문가 반열에 오름
 - 사회활동에 능동한 여가참여 희망
- 2단계 (몰입기)**
 - 한가지 여가활동에 집착
 - 여가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 동호회 활동 활발
- 1단계 (입문기)**
 -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
 - 다수의 공인활동
 - 가정내 여가활용

여가생활주기:
생활주기에 따른 여가생활의 특성을 반영한 여가 발달단계로 참여·확장기(1단계), 선택·집중기(2단계), 지속·몰입기(3단계) 구분(윤소영, 2016)

구분	특성 및 과업
참여·확장기 (0~23세)	여가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 경험, 기술 및 지식을 확장시키는 여가경력 개발 단계
선택·집중기 (24~49세)	심신의 활동이 최고로 발휘되는 시기, 신념/노력에 대한 여가유능감이 고조되는 단계
지속·몰입기 (50세 이상)	50대 은퇴 후 생애 위한 설계, 여가생활 양식 구축, 자녀 독립으로 인한 부부여가생활 개발
	60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여가활동, 신체적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 추구, 적절한 여가생활 탐색

2.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구조

14

2-2. 정책제안(예. 문화로 치유)

-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 : 정신질환 치료/ 정신건강 돌봄 / 정신건강 치유

구분	주요정책	특징
치료 (Treatment)	- 정신건강서비스(복지부)	- 정신질환 치료, 재활 - 수동적 참여, 정신건강 치료
돌봄 (Care)	- 커뮤니티케어(복지부) - 상담 및 교육서비스(여가부)	- 정신치료-회복 연계 지역사회 돌봄 - 수동적+능동적 참여 혼합, 정신건강 관리
치유 (Healing)	- 문화 및 인문치유(문체부) - 관광치유(웰니스, 치유순례 등)(문체부) - 산림치유(산림청) - 농업치유(농촌진흥청) - 해양치유(해양수산부)	- 스스로 회복하는 자가치유 능력 강화 - 능동적 참여, 자가치유(자립)

2.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구조

14

2-2. 정책제안(예.문화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강화

문화기본법 제5조 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항.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1차기본계획 : ‘21~24)

추진 전략 및 핵심 과제	1. 문화의 다양성 보호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 국제기구 및 국가간 문화정책성 보호를 위한 협력 활성화
	2. 사회적 약자의 문화참여와 접근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주체의 문화권 보장 ㉣ 문화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3. 문화 경제성 가치 확산과 공공기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 활성화 ㉥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soyoung@kcti.re.kr

감사합니다.

[1-1 토론]

토론문

손미정
예술의전당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현장의 제언

손미정(예술의전당)

들어가는 말

2020년 이후 유럽의 다양한 문화정책 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예술의 ‘수월성’과 더불어 ‘접근성’ 확대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예가 많았다. 많은 나라들이 문화예술을 복지정책과 더불어 살펴본다는 뜻이며 소비행위만이 아닌 문화예술에의 접근 자체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우리나라에는 ‘향유’라는 단어가 2005년 문화예술진흥법에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문화 복지와 관련한 조항에 사용된 것은 2012년이 되어서야 등장하였다. 2010년 이후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주목받게 되었는데, 예술이 사회적 차원에서 타인과의 협동 및 포용력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고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예술에 있어서 창작과 소비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호해지면서 예술영역에 대한 기존의 범주가 변화하고 있고,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도 또한 창작하고 참여하는 주체가 전문적인 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확장됨으로써 과정중심의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상에서 누구나 예술을 창조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생활예술 개념이 강화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달라진 예술관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는 정책이기를 바란다.

본문

몇 년 전부터 예술지원정책, 관련논문, 연구자료 등을 살펴보면 과거 콘텐츠 제작이나 창작 지원에 집중되었던 정책이 서서히 예술을 즐기는 일반 국민들의 ‘향유’로 옮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글은 문화관련 지원정책이 국민복지 시스템과 결합되어 문화소외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정책이 되도록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제기하는 소소한 제언이다.

1. 문화권 보장을 위한 공공문화서비스

발제문에 따르면 공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문화권, 문화향유권, 문화참여권 등의 개념들의 설명과 함께 이러한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로서의 문화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모두가 누리는 문화 환경이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필수적이며 반드시 정책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문화라는 부분은 공공재적으로 해석되며 기본권처럼 누리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향유에 있어서는 사회경제학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분야이므로 그 간극을 정책으로 메워주어야 한다. 현장에 있다 보면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아무래도 문화에 관심이 많은 층이 되며 주요 소비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를 획득하기 이전의 중요한 점은 어릴 때의 경험이라고 보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다. 어릴 때 문화적 경험이 있었던 아동은 청년기, 성인기를 그냥 지나더라도 후에 문화애호가가가 되어 있

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이다. 그렇다면 문화정책으로 어릴 때 문화적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입시에 집중하는 현실에서 학교 교육에서 예술 교육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육 분야도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아동기 때 학교 교육이 문화권을 학습권의 일환으로 모두 공평하게 누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면 문화바우처로 그치는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하겠다. 문화소외계층일수록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바우처를 쓰고 싶어도 동반해 줄 어른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설사 현장에 혼자 오더라도 바우처를 쓰는 행동 자체가 어린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인솔자가 있는 학교나 지역 소단위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국고를 받아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예술단체들의 사회공헌 사업도 필수적으로 사회소외계층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하고 나머지를 좌석을 일반 시민에게 오픈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러한 정보접근이 원활한, 유료 티켓을 기꺼이 살 수 있는 일반 애호가들로만 객석이 채워질 수도 있다. 현재 각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기본 문화권 획득을 위한 교육, 복지와 연결하여 실질적인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2. 문화안전망의 범위

또한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제기된 문화안전망의 개념은 문화소비자들이 최소한의 문화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라 생각된다. 다만 지난 코로나 상황과 얼마 전 이태원 사고 때에도 경험하였듯이 국가 재난 초기에 일률적인 멈춤은 국민으로서 감수할 수 있으나 장기화 된다면 할 때는 반드시 산업적인 여파를 고려했으면 하는 점이다. 이태원 사고 때 많은 공연들이 추모기간에 갑작스럽게 공연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공연단체에게 추모의 방법을 맡기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1년 내내 준비한 공연을 뜻하지 않게 못하게 되어 망연자실한 기획사들의 경제적 손실과 그 공연에 생계가 딸린 스태프들의 허탈함도 안타까웠다. 반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에서는 공연 프로그램을 바꾼다거나 공연시작 전 짧은 추모 연주를 덧붙이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추모를 하는 모습에서 자율적이면서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호하는 모습이 느껴졌다. 문화안전망은 문화를 즐기는 소비자의 안전망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안전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3. 문화정책실현 방법 중 문화시설 최소기준과 적정기준

문화를 향유하는데 공공문화시설이 근거리에 있다면 훨씬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공공기관의 문화지원 실태를 심사하거나 새로운 문화시설의 설립을 주장하는 다양한 문건들을 보면 기존 문화시설이 그 역할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여 그 지역의 문화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문화소비자들이 문화향유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 콘텐츠의 수준이라고 한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콘텐츠 제작 능력이 우수해짐에 따라 방송프로그램도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제작비의 부족이나 지역의 열악함을 이유로 부실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묵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시설 최소기준이나 적정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과 동시에 인근 지역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 공간이 있는지, 그 공간에서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매개자들(기획자, 예술교육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들을 참여시키려면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인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

다. 어느 정부시절에 수없이 많이 생겼던 도서관이 지금은 반대로 많이 없어졌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다. 동네 주요 문화시설로 특특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문화를 즐기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동네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녁 6시 이후면 문이 닫히는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4. 문화 매개자를 위한 지원

위의 살펴본 여러 가지 사안들은 주로 지역이나 문화시설 등의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라면 필자는 그 모든 것 위에 문화예술 기획자, 매개자들에 대한 인력양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많은 예술인들이 직접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각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예술가들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콘텐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융합의 시대, 공간의 개념이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 문화예술 콘텐츠로 일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창조적인 생각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주려면 예술기관에서 행정가로만 머무는 사람들 대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융합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매개자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소 기준과 적정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좋은 문화시설을 구비하여도 그 공간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채울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지자체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화려하게 지어져 있는 문화시설이 몇몇 우수기관을 제외하면 주말에만 운영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외면 받는 곳이 많다. 이러한 전철을 되밟지 않으려면 문화예술기획자, 예술교육자 등 에게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불필요한 자격증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경험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르 간 융합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타문화와 우리문화를 비교하여 좋은 점을 뽑아내는 혜안을 가진 우수한 청년 인원들을 문화예술매개자로 키우기 위한 장기 계획도 매우 필요하다. 그만큼 시설보다는 그 곳을 채우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5. 단순 학습에서 문화 향유를 표현하도록 지원하는 문화서비스

사실 지금도 동네마다 사설 교습소,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의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없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문화 향유 차원이 되려면 문화경력 관리 제안에서 보듯이 단순 학습 이후에 자신들이 학습으로 배운 것을 발현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 비슷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의 문화예술 시설들이 권역, 역할을 구분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들의 발현의 장으로 쓰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학습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영국 맨체스터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여러 가지 실험과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지역에서 연극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몇 년 전 한국에 내한 했었다. 그때 필자는 한국의 고령자들을 위한 하루짜리 연극 워크숍을 기획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연극을 해보지 않은 70-80대의 고령자가 연출가의 지시에 따라 언어로 혹은 몸짓으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꾸며

나가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느낀 적이 있다. 그 내용도 감동이었지만 손에 손을 잡고 자신의 이야기에 눈물짓는 다른 사람들과 눈길을 나누고 타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공감하는 그 분들의 표정은 그 어떤 예술작품보다도 아름다웠다.

정부의 문화정책 지원 사업으로 학교에서 단체로 본 공연 한편이 어린 소년의 눈을 뜨게 해주어 먼 훗날 그 소년이 올림픽 개막식의 감독으로 활약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렇듯 문화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금씩 바뀌면서도 긴 호흡으로 지속성 있게 계속되어야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1-1 토론]

토론문

주호진
가톨릭관동대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포럼 토론문 □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발표자의 “모두를 위한 문화실현”의 제목에 우선적으로 큰 공감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모두”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는 큰 의문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발표문에서는 ‘문화권부터 국가 최소기준’까지 모두를 위한 문화를 위해 필요한 원칙과 기준들을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역시 전문가로서 아주 잘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화정책의 실현’부분의 내용들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는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자로서 본 논문에서 향후 연구자께서 연구내용을 발전시키면서 고려할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모두”라는 표현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론적 그리고 관념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만 현실적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불가능한 측면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정책의 실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 인사, 법령(제도) 그리고 예산부분이 필수적이라고 볼 때 향후 실현부분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체계적으로 변화·발전시키면서 구성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구규모에서 지역의 정주인구 개념을 관계인구나 생활인구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자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소멸지역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기준과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문화적 측면과의 연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 문화경력 관리의 정책제안의 경우에도 토론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단계와 연령의 경우에는 좀 더 고민해 보는 것과 함께 내용(분야, 유형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개발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째, 문화로 치유라는 정책제안에서는 ‘문화치유’라는 부분의 임상의학적 측면과의 연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변화발전이 필요하며, 최근 많은 정책연구 및 임상연구와의 융·복합연구를 진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산림치유, 농업치유, 해양치유 등에 대한 벤치마킹 및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섯째, 정책의 경우 최근에는 융·복합 관점이 주류라는 것을 고려할 때, 모두를 위한 문화와 관련한 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다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 등과의 연계성을 더욱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론자로서 아주 좋은 논문을 읽으면서 많은 공부와 고민을 하게 해 주신 발표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 발표]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창작/참여 분야 제안

서우석
서울시립대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포럼>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창작/참여 분야 제안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주최: 한국문화정책학회

일시: 2022년 12월 15일(목) 장소: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D-볼룸

목차

- 논의의 배경
- 창작/참여 분야 기본방향 제안
 - 문화권 보편적 실현
 - 문화의 가치 확산

논의의 배경

문화진흥기본계획 창작/참여 관련 연혁

- 문화기본법 제정 (2013.12.30)
-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년~2019년) 수립 (2015.7.28)
- 문화비전 2030 발표 (2018.5.16)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2021.9.24)
-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발표 (2022.7)

문화권과 기본이념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근거로서 문화기본법(제8조)
- 문화기본법의 핵심은 국민의 권리로서 문화권 인정(제4조)
 -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보편적 권리로서 문화권 인정
 -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문화권의 신장(제8조 3항 6호) 포함하도록 명시
 - 문화권이 적용되는 활동은 자유로운 문화 창조, 문화 활동 참여, 문화 향유로 구분되며 이 발표에는 이 중 자유로운 문화 창조와 문화 활동 참여를 다룸
- 기본이념으로 문화의 가치 확산 목적을 위한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을 원리로 제시하여 문화정책 방향 제시(제2조)

5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창작/참여

-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창작은 5개 정책과제 중 “문화진흥 기반 구축”에서 제시
 - 문화재정 확충, 공정거래 및 창작지원 제도 개선, 문화예술 창작기반 구축, 문화인력 육성 및 연구 강화, 문화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확충 등 제시
 - 문화예술 창작 기반 구축으로는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대, 문화예술 후원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제도 개선, 예술 유통 활성화 및 제도 개선 제시
- 창작 관련 주요 과제를 망라하였으나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과의 관계, 문화진흥기본계획 포함 사항 등과의 관련성은 명시되지 않음

6

문화비전 2030에서 창작/참여

- 2030년 목표시점의 장기 계획으로 제시된 문화비전 2030의 내용을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기본법에 근거를 둔 법정계획은 아니나,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제시된 가치를 3대 방향으로 설정하여 9대 의제 제시
 - 개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의제로 개인의 문화권 확대, 문화예술인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성 평등 문화의 실현 제시
 -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을 위한 의제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문화분권 실현 제시
 -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위한 의제로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제시
- 창작은 주로 문화예술인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에 제시
 -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제시도 관련 내용 포함

7

윤석열정부 문화정책에서 창작/참여

- 윤석열정부 문화정책의 내용은 아래의 발표문 참조
 - “새정부 문화정책의 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매력국가“ 최성희,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2022.9.23).
 - “자유, 공정, 문화매력국가. 제20대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의의” 조현성, 『에이스퀘어』, Vol.01 (2022.01).
- 자유, 공정의 가치를 문화정책에 적용
 - 개인의 문화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 참여하는 자유 시민의 상 제시
 - 예술인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 중요
- 문화정책의 목표이자, 결과로서 문화매력국가 제시
 - 보편적 문화복지 수혜자인 자유 시민에 의해 문화매력국가 달성
- 세부적으로는 예술인 지원체계 강조, 예술 산업화 지원, 예술인 안 전망 강화,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이 두드러짐

8

창작/참여 분야 기본방향 제안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문화매력국가”

- “모두”에 대한 강조는 문화권의 보편적 실현을 위한 의지로 해석
 - 문화기본법에서 차별 없는 문화권 보장 구현을 위해 차별적 결과를 낳는 제약요인들을 파악하여 극복하는 노력 필요
 - 문화권의 보편적 실현을 위한 기본 출발점으로 자유로운 창조 활동이 보장되어야 함
 - 문화권 실현의 차별적 결과를 낳는 장애요인은 신체 장애도 있으나 일반 국민이나 예술인이 겪는 계기성 장애도 있음.
- “문화매력국가”는 문화의 가치 확산 목표로 이해
 - 문화의 가치 확산을 통해 “문화매력국가” 달성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체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공간적 확장과 영역 확장이 필요함
- 문화권의 보편적 실현과 문화의 가치 확산을 통해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내용적으로는 실현될 것으로 판단

창작 참여 분야 문화진흥 기본계획

문화권 보편적 실현

- 자유로운 창조 활동
 - 예술인 권리 보장에 따른 창작활동
 - 예술인 조합 활동을 통한 권익 보호
- 장애요인 극복
 -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신체 장애)
 - 예술인 안전망 확충과 재난극복 문화예술서비스 제공 (계기성 장애)
- 참여 확대
 - 예술인 결합 확대를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
 - 세대 감성에 부합하는 사업 차별화
 - 언택트 문화 활동 기반 강화

문화의 가치 확산

- 주체 역량 강화
 - 예술인 자생 기반 확충
 - 민간 부문과 협업 협치 확대
 - 예술교육 혁신과 예술대학 지원
- 공간적 확장
 - 지역 문화공간 이용 활성화
 - 문화공간의 다각적 확장
 - 다각적 다층적 글로벌 협력 지원
- 영역 확장
 - 예술과 기술 융합 활동 지원
 - 예술과 산업 연계성 확보
 - 예술 기반 지역 브랜드 강화

11

문화권 보편적 실현

자유로운 창조 활동

- 자유로운 예술 활동 보장을 통한 창조 활동은 문화권의 핵심
 - 헌법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른 자유로운 예술 활동 보장 필요
 - 헌법 제22조는 국민의 예술의 자유(1항)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함(2항)을 명시
 -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제7조)와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제11조) 명시
- 직업적 권리 증진을 위한 예술인조합 구성 및 활동
 -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계약 당사자 예술인들의 조합 결성 및 협의 요청 권한을 명시(제14조)

13

장애요인 극복

- 문화권의 보편적 실현을 어렵게 하고 차별적 결과를 낳게 하는 장애요인을 신체적 요인과 계기성 요인으로 구분
- 신체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문화권 실현이 어려웠던 장애인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은 이미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 중
- 계기성 장애요인은 예술인과 일반 국민을 구분해서 논의
- 예술인의 계기성 장애요인으로서는 실업이나 산재에 의해 예술활동 중단을 겪게 되는 상황이 있어 예술인 안전망 구축 진행 중
 - 예술인 고용보험이 당연가입 방식으로 도입되었고, 예술인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방식 도입이 추진 중
 - 예술인 조합을 바탕으로 공제회 활동이나 소액금융 사례 존재
- 일반 국민의 계기성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재난극복에 도움되는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이 있음
 - 재난극복을 문화예술 치유사업 전개 중

14

참여 확대

- 예술인 결합 확대를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
 - 예술인과 생활문화의 결합 확대 지원으로 생활문화 수준 향상과 문화예술생태계 강화
- 언택트 문화활동 기반 강화
 - 코로나 감염을 통해 문화예술활동의 온라인 전환 증가
 - 디지털 환경을 통한 생활문화 활동 양상 변화
 - 플랫폼 경제로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활동 편입
 - 감염 위기가 상존하는 뉴노말 시대 언택트 문화활동 기반 강화 필요
- 세대별 감성에 부합하는 사업 차별화
 -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경계 해소되는 현실에서 세대간 감성 차이 심화
 - 세대별 감성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 및 홍보 전략 차별화로 문화활동 참여 확대 추진

15

문화의 가치 확산

주체 역량 강화

- 예술인 자생 기반 확충
 - 예술시장 성장 지원
 - 예술시장 투자 확대와 예술가 수입원 개선의 접점 확대
 - 불공정 거래 가능성의 지속 관리를 통한 건전한 예술시장 성장 환경 조성
 - 예술의 기업가적 활동 지원
 - 예술가의 시장 적응력, 브랜드 관리 역량 향상 등 지원, 컨설팅 수행
 - 사례: 서울문화재단과 롯데백화점 협업 사례로서 S스토어



창작레지던시와 아트마켓의 결합으로 예술가의 수입 창출과 시장 적응력 제고

17

주체 역량 강화

- 민간 부문과 협업 협치 확대
 - 다양한 민간 주체에 의해 문화예술서비스 제공
 - 문화예술의 창작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민간 주체 협력 필수
 - 그동안 정책 지원 기관과 문화예술 주체 사이의 관계만이 주목되었으나, 다양한 민간 주체와 협력을 통해 사업 수행의 효과성 증진 요구됨



미국의 Creative Placemaking 사업의 다양한 주체들

(출처. <https://mainstreetagency.org/blog/creative-placemaking/>)

18

주체 역량 강화

- 예술교육 혁신과 예술대학 지원
 - 문화의 가치 확산에 부합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 예술대학 지원 바탕으로 예술인 후속세대 양성 강화



ARTE의 2021 문화예술교육혁신 시범사업

19

공간적 확장

- 지역 문화공간 이용 활성화
 - 다양한 재생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많은 문화공간 창출
 - 창작 레지던시의 전국적 확장
 - 관계인구 선도자로서 예술가의 가능성 증대



폐교를 개조하여 도내 작가와 도외 작가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제주 예술곳 산양 레지던시

20

공간적 확장

- 문화공간의 다각적 확장
 - 문화기반시설 확장이 제1차 기본계획의 핵심이었으나 인구 소멸 상황에서 확장 어려움
 - 문화기반시설의 지리적 접근성과 시간적 접근성 개선에도 한계
 - 공공공간을 이용한 예술 작업 확대
 - 거리예술 활성화와 공간과 예술의 결합 강화
 - 민간영리시설을 공공 문화공간으로 활용
 - 문화도시 춘천의 <도시가 살롱>: 책방, 카페, 농가, 식당, 공방, 게스트 하우스 등의 공간 주인장이 제안하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으로 다양한 문화기획 경험과 지역문화 가치 발견



21

공간적 확장

- 다각적 다층적 글로벌 협력 지원
 - 서구 예술가와 개도국 예술가 사이의 매개 역할 수행
 - 전 세계적인 문제의식 공감과 확산의 노력

※ 2021년 지역문화 국제 교류 지원사업 선정 내역

연번	지자체	수행기관	사업명	국가	분야
1	김포시	김포문화재단	프리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미국	전시, 워크숍
2	해남군	시화풍정 담소	평화의 시마을 해남	인도	공연, 워크숍
3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효(孝)의 춤, 영무원 천장 중 <노제의> 부분	프랑스	공연, 워크숍
4	제천시	제천문화재단	한방(약초)자연치유의 예술적 민담	중국	강연, 전시, 체험
5	담양군	담양군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 노드를 저장하다	중국	전시, 레지던시
6	정선군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정선군-키자흐스탄 알마티시 문화예술교류 "A-Culture Road"	키자흐스탄	공연, 전시, 체험
7	영월군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영월-히가시카와의 "별의 기억"	일본	전시, 시사회, 워크숍
8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	한-몽 유사전통놀이기반 융합콘텐츠 개발·운영	몽골	워크숍, 컨퍼런스

22

영역 확장

- 국내 예술과 기술 융합을 지원하는 공공과 민간의 사업 확장 추세
 - 지속적 투자와 민간 분야 매칭 투자 및 협업으로 사업 성과 축적 필요
 - 기초예술과 문화산업 매개하는 융합예술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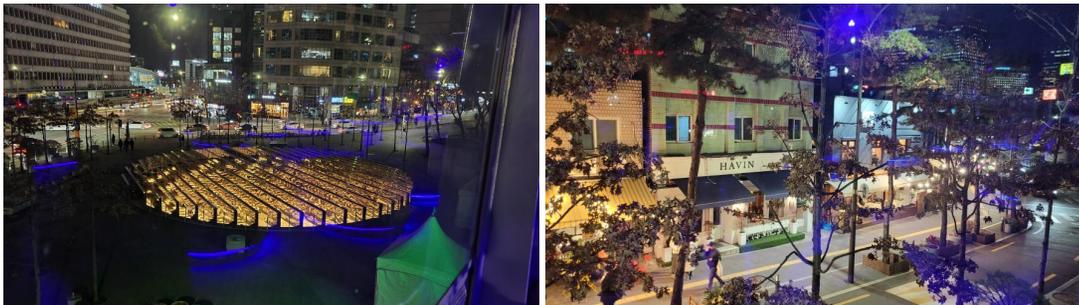


현대자동차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 프로젝트를 통한 AI 디자이너와 설치미술가 협업 성과 전시 (출처, 매일경제 "현대차그룹 제로원, '예술가·개발자 프로젝트 전시회' 선보" (2020.11.03)

23

영역 확장

- 예술 기반 지역 브랜드 강화
 - 공공예술 사업에 지역 문화정책 주체의 참여 확대 필요
 - 공공예술 분야 중앙과 지자체의 전략적 협력 사업을 통한 국가적 랜드마크 창출 시도 필요



서울시 만리동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공공미술 "윤슬"

24

재원 조달 방안

- 문화진흥기본계획에는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제8조 3항 10호) 포함 필요
-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향상에 문화 분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
 - BTS 국가이미지에 긍정적 영향력 1위로 '문화콘텐츠 강국'의 한국 이미지 각인 (문체부 2021 국가이미지 조사)
 - Bloom Consulting의 국가 브랜드 순위 조사에서도 한국이 최근 세계 20위로 약진한 원인을 한국의 문화산업, 뷰티산업으로 분석
- “문화 분야는 국가 재원 배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문화매력국가”의 목표에 부합하는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25

감사합니다!

[1-2 토론]

토론문

김승일
중앙대학교

토론글- 김승일

먼저 본 발표를 위하여 원고를 준비하신 발제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정책 방향이 예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며, 보편적 문화 복지 수혜자인 자유 시민에 의한 문화매력 국가를 제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문화의 가치 확산과 주체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예술인 자생기반 확장과 시장성장 지원, 예술가의 수입원 개선, 예술가의 기업가적 활동지원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문화진흥 수립에 중요한 논제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재원조달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향상에 비해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재원이 아직은 미비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문화매력 국가에 부합하는 예산편성과 증액의 조건이 해결되기 위한 방안에 어떠한 요인들이 있을지 의견을 여쭙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1-2 토론]

토론문

이운정

대한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

토론자:이윤정((대한무용협회 인천부지회장)

창작 참여 분야 문화진흥 기본계획

문화의 가치 확산

주체 역량 강화

◇예술교육 혁신과 예술대학 지원

- 문화의 가치 확산에 부합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 초·중학교 교과목에 무용교육포함이 시급하다.

예술교육은 음악, 미술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개성과 적성을 살리고 그들이 창의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선진국형 예술교과(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처럼 확대되어야 한다.

- 예술대학 지원 바탕으로 예술인 후속세대 양성 강화

:많은 대학에서 예술대학 특히 무용과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천에는 음악학과와 무용학과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균형잡힌 예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천예술계의 현실이다. 즉, 예술가 양성이 인천시에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이다. 예술고등학교 - 예술대학을 거쳐 예술단체로 이어져야 하나 현재의 상황은 예술대학이 없는 상황으로 예술가 양성에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 자유로운 예술 활동 보장을 통한 창조 활동은 문화권의 핵심

- 헌법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른 자유로운 예술 활동 보장 필요
- 헌법 제22조는 국민의 예술의 자유(1항)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함(2항)을 명시

:헌법 제22조는 1항과 2항에 명시되어 있지만 국민이 예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한정된 예술교육만이 아닌 다양한 예술교육을 접할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예술가 양성(초-중-고(예술고등학교)-예술대학교) 구조가 각 시·도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1 발표]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정책 방향

채경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정책 방향

2022.12.15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채경진

CONTENTS

I. 들어가며

II. 문화유산 분야 주요 계획

III. 고려해야 할 환경 변화

IV. 마치며



들어가며

1. 배경

◆ 1차 문화진흥기본계획과 문화유산 분야 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6.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8.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확대

◆ 최상위 계획으로서 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위상 문제: 실효성이나 활용도 낮음

→ 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전통문화 분야와의 정합성 필요



들어가며

2. 목적

◆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특히 문화유산) 분야의 주요 계획 검토를 통한 이슈 도출

◆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를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 분석

◆ 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정합성 제고 방안 마련

- 관련 정책목표: 우리문화의 매력 나누고 더하기

- 관련 정책과제: 전통문화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한국어 확산, 한류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국제문화교류, 남북문화, 기록을 통한 일상의 문화화

*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2차(2022년) 문화진흥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안)'

5



II 문화유산 분야 주요 계획

◆ 문화재 법령 제정 연혁

- 문화재보호법에서의 유형/기능 분법, 공간 대상 법령 제정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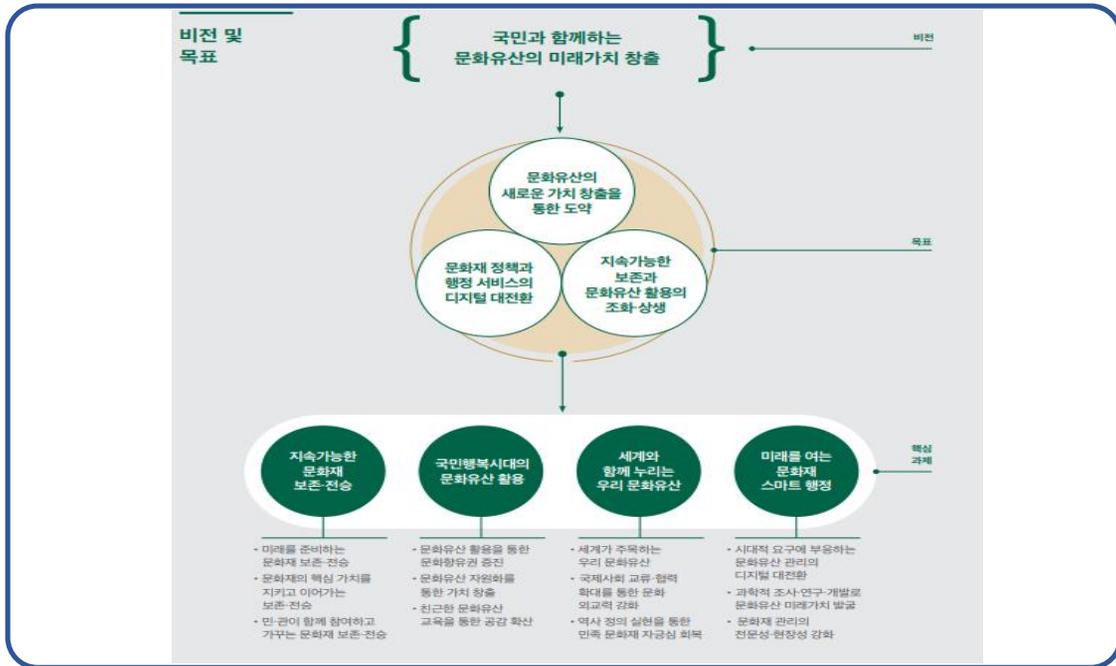
II 문화유산 분야 주요 계획

◆ 문화재 분야 각종 계획들

계획수립이 포함된 법령(기간)	비전 및 비법정계획(연도)
문화재보호법(22-26)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 (201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18-27)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 계획(202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4-28)	포스트 코로나 문화유산 미래 전략(202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2-26)	문화재 활용정책 로드맵 (2018)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21-2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22-2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22-26)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3-27)	

II 문화유산 분야 주요 계획

1. 최상위: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기본계획(2022~2026)



출처: 문화재청 누리집

9

II 문화유산 분야 주요 계획

2. 제2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2022~2026)

「제2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2022~2026)」		
추진 전략	모두가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지향적 무형문화재 보호체계 마련 ▶ 무형유산 자원의 가치 발굴 및 확산 ▶ 지역 문화유산 보호기반 강화 ▶ 다양한 전승공동체 육성
	지속적이고 창조적인 무형문화재 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별·전승자별 특성화된 지원 ▶ 무형문화재 공개 및 교류기반 강화 ▶ 시대에 부응하는 전승체계 구축 ▶ 무형유산 산업화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
	일상에서 공감하는 무형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친화형 무형유산 체험교육기반 강화 ▶ 무형유산 콘텐츠 및 향유기반 강화 ▶ 세계가 공감하는 K-무형유산

출처: 문화재청 누리집

10

II 문화유산 분야 주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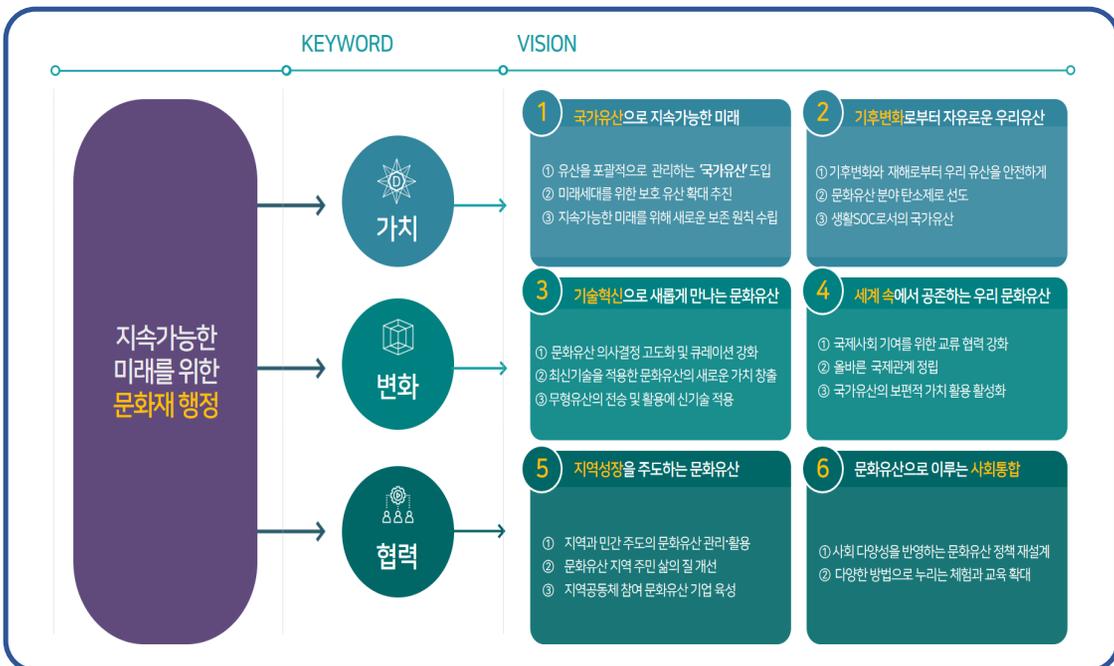
3.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2022-2026)

비전	세계유산의 OUV를 온전하게 미래세대로 전하다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미래세대 계승 · 세계유산의 포괄적·체계적 관리역량 강화 ·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활용 및 문화자원화 · 세계유산 국제적 역할 강화 및 국제협력에 기여 	
추진 전략	전략 과제	핵심 과제
	지속가능한 보존 체계 마련	1-①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지원 1-② 세계유산지구 지정 1-③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1-④ 국내법제 정비 및 국제규범 방향 제시
	포괄적·체계적 관리역량 강화	2-① 상시적 관리체계 마련 2-② 세계유산 정보체계 구축 2-③ 세계유산 국내 네트워크 강화 2-④ 연속유산의 통합적·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2-⑤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활용 및 문화자원화	3-① 세계유산 인식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3-② 세계유산 향유 기회 확대 3-③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기반마련
세계유산 분야 국제협력 강화	4-①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 4-② 세계유산 분야 국제사회 역할 확대 4-③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4-④ 세계유산 국제기구 지원	

출처: 문화재청 누리집

II 문화유산 분야 주요 계획

4. 문화재 행정 60년 기념 6대 미래 비전



II 문화유산 분야 주요 계획

5. 최근 문화재 분야 주요 키워드

구분	문화재 기본계획 (2022-2026)	무형문화재 기본계획 (2022-2026)	세계유산 종합계획 (2022-2026)	포스트 코로나 문화유산 미래 전략(2020)	문화재 행정 60년 정책미래 비전 마련 연구(2021)
보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스마트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지향적 보호체계 전승공동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포괄적·체계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 데이터댐 생활환경 개선 환경친화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무형유산 신기술 적용 기후변화 탄소제로 국가유산 지역주민 삶의 질
교육 ·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향유권 지역재생, 경제가치 현장·수요자 중심교육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문화재 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유산 산업화 체험, 교육 기반 콘텐츠, 향유기반 공개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OUV 활용 및 문화자원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세계유산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유공간 향유지원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가치 체험, 교육 사회 다양성
국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와 함께 누리는 우리 문화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K-무형유산 교류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협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교류협력 강화 역사왜곡 대응

출처: 각 계획에서 재구성

II 문화유산 분야 주요 계획

6.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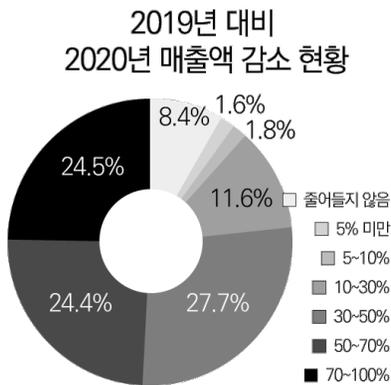
- ◆ 문화유산의 대상이나 기능이 세분화, 다양화, 확대 되고 있음
- ◆ 최근 공간 단위의 법령의 증가와 이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는 경향
- ◆ 주요 키워드: 미래가치, 디지털, 지속가능성, 산업, 콘텐츠, 환경(기후변화), 국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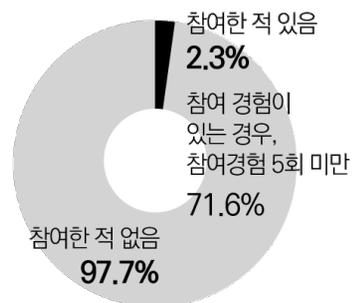
III 고려해야 할 환경 변화

1. 전통문화 분야 생태계 위기(공예)

- ◆ 공예종사자의 91.6% 연매출 감소(7% 휴업 경험)
- ◆ 국내 유통 및 판로확보 어려움 토로 79%, 해외 판매 활동(박람회 및 전시회) 경험 전무 종사자 97.7%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 경험



출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1년 경영실적보고서

III 고려해야 할 환경 변화

1. 전통문화 분야 생태계 위기(국악)

◆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국악 분야 활동 '19년 대비 '20년 5.5배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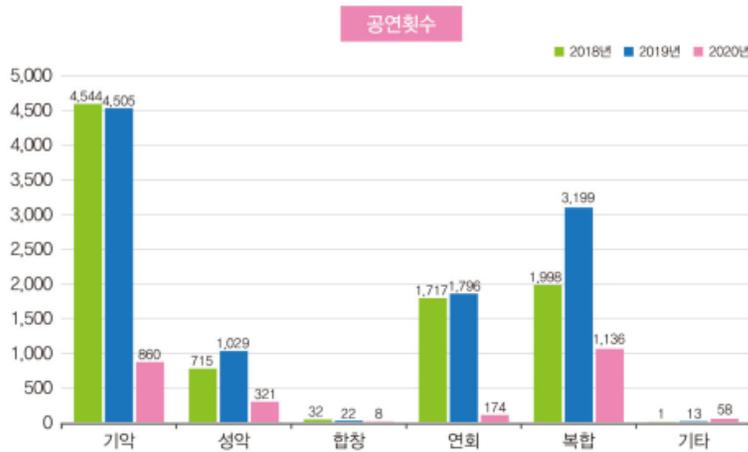


출처: 문예연감2021(2020년도판)

III 고려해야 할 환경 변화

1. 전통문화 분야 생태계 위기(국악)

◆ '20년 기준 전년대비 횟수가 연회 > 기악 > 합창 > 성악 > 복합의 순으로 공연 횟수 비율 감소



출처: 문예연감2021(2020년도판)

III 고려해야 할 환경 변화

1. 전통문화 분야 생태계 위기(무형문화재)

- ◆ 보유자(평균 74세), 전승교육사(평균 64세) 고령화 문제와 전승 단절 위기
- ◆ 전승위기 종목 35종목(예능 5, 기능 30)
- ◆ 하지만, 이수자의 증가는 점차 전통문화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 기회

(단위: 종목,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종목	138	142	146	149	153	
전승자	보유자	170	168	172	175	172
	전승교육사	286 ¹⁾	285 ¹⁾	271 ¹⁾	253 ¹⁾	248 ¹⁾
	이수자	6,171	6,363	6,526	6,608	6,810
	소계	6,627	6,816	6,969	7,036	7,230
	보유단체	66	66	70	70	71
명예보유자	17	17	16	33	42	
전수장학생	74	66	56	69	66	

출처: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2021년)

19

III 고려해야 할 환경 변화

2. 문화유산 정책의 방향

◆ 문화유산 현장 개정: 보존 중심에서 다양한 가치 중심으로 변화

문화유산 현장(1997년)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 문화재는 모두 민족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 사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유산 현장을 제정한다.

-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 문화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우분별한 개발**로부터 **보존**되어야 한다.
-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학교·사회 교육을 통해 널리 **알려**워져야 한다.
-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문화유산 현장(2020년)

오랜 역사를 이어 온 이 땅에는 겨레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고 있다.

문화유산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이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미명(美命)한 권리이자 의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문화유산의 원래 모습과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며, 역사·문화 환경과 자연유산을 보호한다.
- 문화유산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국민, **지역 공동체**, 정부는 그 보존과 가치 구현에 힘을 모은다.
- 문화유산을 누구나 **일상에서 배우고 즐기며 맘껏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문화유산이 **과학, 기술, 예술, 관광**과 어우러져 **미래자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한다.
- 문화유산의 인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한다.
- 우리는 이와 같이 실천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이어 가며 다음 세대에 문화유산을 더욱 값지게 전해 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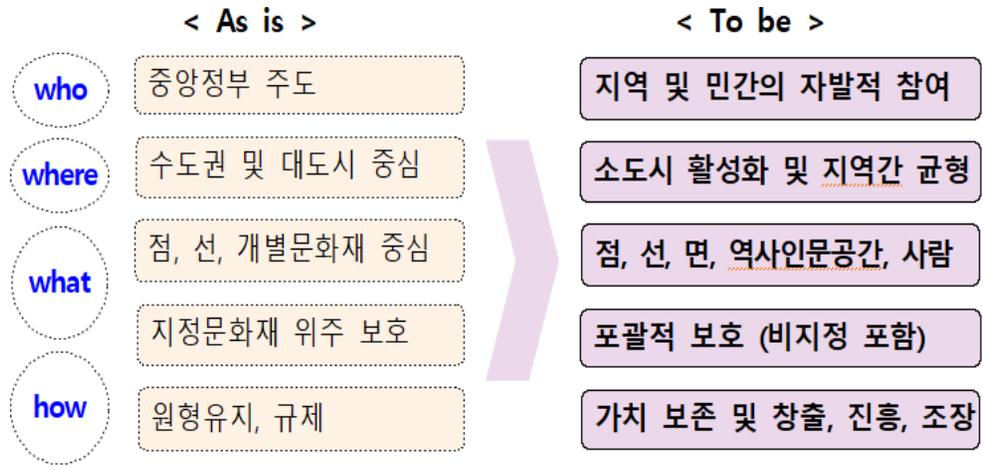
출처: 문화재청 누리집

20

III 고려해야 할 환경 변화

2. 문화유산 정책의 방향

◆ 지역, 공간, 비지정, 진흥으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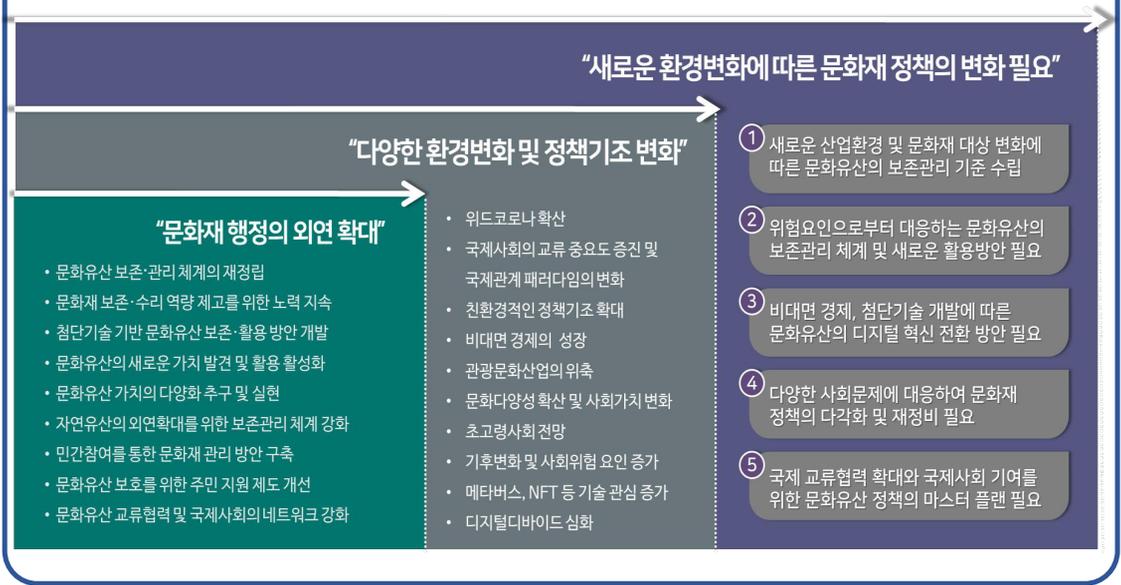


출처: 문화재청(2019).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

III 고려해야 할 환경 변화

2. 문화유산 정책의 방향

◆ 산업, 보존관리 체계, 활용, 디지털, 사회문제 대응, 국제 교류협력



출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문화재 행정 60년 정책미래 비전 마련 연구(2021)

III 고려해야 할 환경 변화

3. 문화유산 관련 대외 정책 동향

◆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디지털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2030 유엔 SDGs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20년 전 세계 발전 규범으로 '인류(People)', '지구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의 기본정신을 토대로 경제·환경·사회정책 등을 아우르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우리나라는 UN-SDGs를 연계하되 국내 여건을 반영·보완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전략과 목표 수립
유네스코 2030 문화 지표 (Culture 2030 Indicator)	2030 문화지표는 총 4개 주제영역 아래 22개의 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유산 보호', '지속가능', 기후적응 및 회복탄력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
2021 로마 G20 문화장관회의 주요 의제	2021년 7월 로마에서 열린 'G20 문화장관회의'에서 문화유산 보호와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훈련과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문화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기술,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서의 문화창의 분야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5개 의제를 논의
영국 문화부(DCMS) 장관 기조연설	영국 문화부는 '2021 G20 문화장관회의' 장관 기조연설에서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고, 향후 문화와 기후정책의 방향을 제시

출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문화재 행정 60년 정책미래 비전 마련 연구(2021)

III 고려해야 할 환경 변화

4. 전통문화(무형유산) 정책분야 변화 방향

◆ 온라인, 전송공동체, 소멸 위험 무형문화유산 보호, 문화육구, 디지털, 콘텐츠, 향유, 국제협력

구분	환경변화	구분	환경변화
포스트 코로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 선호 증가 관광산업 위축 치유, 회복을 위한 힐링 문화 요구 공동체 약화 	사회, 문화 인구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 1인가구, 다문화가정 증가 도시집중화 심화, 지방 소멸 위험 삶의 질 중시, 육구의 다변화
4차 산업혁명과 한 국판 뉴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및 빅데이터 기술 발전 실감형 기술 활성화 디지털/그린 뉴딜로 일자리 창출 포용사회로 도약 	K-Culture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류 문화콘텐츠 확산 무형유산관련 주변국의 역사왜곡 인류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추세

출처: 문화재청, 2022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행계획

III 고려해야 할 환경 변화

◆ 전통문화 관련 유관기관 현황: 협업을 통한 생태계 회복 필요

구분	전통문화상품 (개발, 유통)	국제교류	시설 운영	매장문화재 발굴	문화유산향유	공연·축제	콘텐츠 제작·보급	문화유산 교육
한국문화재단	○	○	○	○	○	○	○	○
국립국악원		○	○		○	○	○	○
국립무형유산원		○	○		○	○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		○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한국관광공사	○				○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		
유관 협회				한국문화유산협회	한국문화유산 활동단체연합회			한국문화재 지킴이단체연합회

25

III 고려해야 할 환경 변화

5. 시사점

- ◆ 보존의 대상에서 활용의 원천으로
- ◆ 산업, 활용, 디지털, 사회 문제 해결, 국제사회 기여 등 새로운 기능 부각
- ◆ 전통문화분야 경쟁력, 시장성 증대
 -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 디자인 상품화, 전문인력 확보
- ◆ 현재 약한 기능이지만, 미래 강화되어야 하는 기능(전문가 평가)
 - “현재 수준 대비 미래 중요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문화재 활용 (문화재 활용 정책 수립, 문화재콘텐츠 개발 등)
 - 국제교류 (문화재 국제교류, 국외문화재환수 및 활용, 문화재 남북교류 등)
 - 문화재 교육 (문화재교육학회(2021), 문화재청 정책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26



IV

PART 04

마치며

IV 마치며

- ◆ 유무형과 관련된 문화유산/전통문화 정책은 보호 중심의 규제에서 진흥, 조성, 지원 중심으로 전환
- ◆ 문화유산 분야에서 발표된 비전이나 계획의 방향이나 가치가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전략 및 과제와 연동되길 기대
- ◆ 새로운 기본계획은 문화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위상을 다지고, 세부 법정계획들이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야 함
- 이를 통해 실제 활용도나 실효성 역시 높아질 것임



THANK YOU
감사합니다 .

[2-1 토론]

토론문

문주석
국립국악원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정책 방향』을 읽고

문주석(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정책 방향』은 ‘문화유산’과 ‘전통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되새겨볼만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첫째,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시행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문화재보호법(1962~2020)과 문화재 관련 법령을 살펴보았으며,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22~2026), 제2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2022~2026),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2022~2026) 등에 포함된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유산과 기후변화의 가치, 기술혁신과 세계 속의 변화, 지역성장과 사회통합의 협력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화재 행정을 주장하였다. 발표자가 문화유산의 대상이나 기능이 세분화, 다양화, 확대되는 양상과 공간단위의 법령증가와 그에 따른 세부계획수립의 경향으로 제시한 시사점에는 동의하지만, 미래가치·디지털·지속가능성·산업·콘텐츠·환경·국제협력 등의 핵심어가 수반하는 중요도에 비하여 세부내용이 소략하여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 정책의 방향을 보존에서 가치로, 지역·공간·비지정·진흥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문화재 정책의 변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둘째, 전통문화 분야에서는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전통분야 대상은 공예, 국악, 무형문화재 등이다. 해당분야 종사자수 및 공연 횟수의 감소, 고령화 등의 수치를 통하여 전통분야 위기를 감지하였다. 전통분야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정책의 변화, 경쟁력과 시장성의 증대, 상품화, 전문인력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통문화 관련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생태계회복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아픈 지점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동참을 연계하는 방법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발표자가 제시한 총론에는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각론의 구체적 사항들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실행력 있는 세부방안이 요구된다.

‘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정책과제에 해당하는 전통문화의 확산, 지원, 교류 중에서 국제문화 교류에 대한 부분을 첨언하면서 토론문을 가름하고자 한다. 최근 국공립 및 유관기관 등에서 개최한 국제문화교류 현황을 통하여 국제문화교류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제문화교류는 한국의 드라마와 K-pop에 기인한 양적팽창에서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를 수반하는 질적 성장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첫째,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증가와 인식전환이다. 외신들의 분야별 보도에 노출된 핵심어 중 한국문화(케이 컬처)는 11.6%를 차지하여, 외교[한반도 정세, 38.4%]와 방역[코로나19, 13.7%]에 이어 세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도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한 취재노력도 진행되며, 한류 현상을 ‘케이 붐(K-Boom)’으로 표

현하였으며, 성장의 원동력을 문화산업의 질적성장, 정부의 체계적 지원,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의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제시하였다.¹⁾

둘째, 한국 문화유산 체험기회의 확대이다. 주한 외국인[유학생, 직장인, 외교사절, 주한미군 등]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였다. 2019년 실시한 <주한외국인 대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에서는 총 46개국 28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줄타기·창덕궁·김장체험 등 총 16종목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500여명의 주한 외국인들에게 농악·아리랑·처용무·판소리·한산모시짜기·강릉단오제·택견·종묘 등 총 50여 종목을 직접 체험하였다. 2022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ACC)에서는 아시아문화예술체험 사업으로 아시아 문화자원(생활문화, 음식문화, 예술문화 등)을 기반으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차별화된 체험교육 <아시아 음악과 함께하는 브런치 여행>, <아시아 빵 로드>, <아시아 국수 로드>를 진행하였다.

셋째, 전통문화를 통한 한류 확산이다. 2022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022 트래디셔널 코리아(Traditional Korea)'를 개최하였다. 한국 전통의례와 놀이 등 한국전통문화를 한류 확산의 기폭제로 활용하였다. 전통의례에는 전통혼례복 녹원삼과 청단령, 한지로 제작한 꽃가마를 전시하였으며, 놀이에는 전통놀이를 현대화한 콘텐츠 '우리놀이상자'를 전시하였다.²⁾ 그리고 2022년 국립국악원에서는 <2022 아시아 궁중음악과 춤의 전승 2>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국제교류진흥원과 함께 '한류동호회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함께 잇기(케이-커뮤니티 챌린지, K-Community Challenge)'를 개최하였다. 민요·태권무·부채춤·한복 분야에서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하여 우승팀을 선발하였다. 현재 한류동호회 회원수는 1억5천명을 넘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1년에는 서예·소고춤·한량무·민요 분야를 진행하였으며, 총 43개국에서 참가하였다. 2020년에는 총 38개국 313명이 강강술래·태권무·민요·탈춤·사물놀이 분야에 참가하였다. 또한 2021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는 한국 지역 전통문화 등 다양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매개로 새로운 한류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몽골·스페인·중국·미국 등과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를 매개로 한 다양한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였다.

한국의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소재로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와 소통하고 문화강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향후 수립될 '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근거에는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의 보전과 전승, 지원과 확산을 넘어 교류와 소통의 핵심어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진흥은 문화적보수성과 자문화주의에서 탈피하여 문화적개방성과 다문화주의를 수용할 때, 확산되고 확대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진단하는 한국문화의 성장요인 중에는 아시아문화적 특성에 해당하는 가족주의 즉,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한국문화에 다수 있다는 점과 세계 공통의 사회적 스트레스를 드라마와 케이팝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세대 간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한국문화의 힘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련되고 수준 높은 한국의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의 독창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교류와 소통의 핵심어로 접근하여 풀어내고, 체험하게 한다면, 한 단계 높은 질적성장을 성취 할 수 있을 것이다.

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1년 12월 23일자).

2)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2년 10월 5일자).

[2-1 토론]

토론문

조순자
성신여자대학교

채경진님의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문

조순자 (성신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문화유산의 정책 방향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전략과 현재성을 반영한 문제해결 중심의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표문은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주요 계획 검토 및 이슈 도출과 최근의 환경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정합성 제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은 향후 5개년 동안 추진될 문화진흥정책 및 문화재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와 공유의 장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내용의 큰 맥락, 즉 ‘문화유산 분야 주요계획’과 ‘고려해야 할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방향에 동의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덧붙임으로써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형문화유산 중 공동체종목은 전승 주체가 다양하고, 범위도 모호하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다양한 전승공동체 육성’을 추진할 것인지 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양한 전승공동체 육성’과 관련하여, 전승공동체는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¹⁾ 2015년 3월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후 2022년 12월 현재까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23개 신규종목 중 16개 종목이 공동체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²⁾ 공동체종목은 보유자가 없는 보유단체 즉 ‘자율전승형 보유단체’와 달리 공동체종목의 전승지원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2012)이자 국가무형문화재(2015)인 아리랑은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한 소절씩 부를 수 있는 보편적인 민요로서 전 국민이 전승공동체 일원이고, 동시에 국악전공자 혹은 보존단체 회원들이 학습하여 가창하는 전문가음악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역할도 다릅니다. 또, 김장문화(혹은 김치담그기) 또한 전승 주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범위도 모호하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³⁾ 좀 더 확장한다면, 한국이 지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형문화유산은 북한과 역사적으로 공유성을 가지므로 전승공동체의 범위도 더욱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과 전승단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전과 다른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승단절 종목은 긴급한 수혈이 필요하며, 문화정책의 지원방식을 ‘직접지원’ 보다는 보조금, 지원금과 같은 ‘간접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⁴⁾ 전승취약종목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각 종목이 본질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지원금을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전승자의 자력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제2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 2022-2026」에 따르면 무형문화재의 ‘지속적이고 창조적인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해 종목별·전승자별 특성화된 지원을 천명하고 있으며

1) 전승공동체의 개념은 2022년 1월 18일 개정, 7월 19일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의 신설 조항 제2조(정의)에 제12호에 따르며,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아리랑(2015.09.), 제다(製茶, 2016.07.), 씨름(2017.01.), 해녀(海女, 2017.05.), 김치 담그기(2017.11.), 제염(製鹽, 2018.04.), 온돌문화(溫突文化, 2018.04.), 장 담그기(2018.12.), 전통어로방식-어살(2019.04.), 활쏘기(2020.07.), 인삼재배와 약용문화(2020.12.), 막걸리 빚기(2021.06.), 떡 만들기(2021.11.), 갯벌어로(2021.12.), 한복생활(2022.07.), 율놀이(2022.11.11.) 등 16개 종목.

3) 한국의 김치 혹은 김장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김장문화’로,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김치 담그기’로 지정된 바 있다.

4) 정철현, 『문화정책』(서울: 서울경제경영), 182쪽.

로, 우선적으로 전승단절 위기에 처한 35개 종목에 대한 특단의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해당종목의 전수생이나 이수자과정에 등록된 사람에게 매월 장학금 명목으로 최저임금비율을 반영한 일정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젊은 인력의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공단과 협업하여 문화재 종목에 취업을 장려하는 방안도 제안 드립니다.

셋째, '일상에서 공감하는 무형문화재'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고한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61.5%로 휴식활동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1 > 문화체육관광부, 『2021 국민여가 활동조사』, 2021.

여가시간 비중을 보면 휴식활동이 61.5%로 가장 높고, 이어 취미오락활동 21.4%, 스포츠 참여활동 6.5%, 사회 및 기타활동 5.2%, 스포츠 관람활동과 문화예술 관람활동이 각각 1.7%, 관광활동 1.3%, 문화예술 참여활동 0.6%로 보고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은 2.3%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유산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부담 없이 일상 생활속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화사회의 노인층은 전통문화를 생활 속에서 체험한 마지막 세대로서 문화유산활동 접근에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노년층을 전통문화지킴이 노인일자리로 연계하거나 '실버농악단'육성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국민 친화형 무형유산 체험교육기반 강화'와 관련하여 학교수업이나 방과후 활동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초·중등학교의 동아리나 자율학기 수업에도 무형유산 종목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학생들은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무형유산을 배울 수 있고 이수자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미래의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발전시킬 주체이며 향유자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최근 문화재 분야 주요 키워드로 부상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전통의 재창조와 과제와 연결지어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형유산이 현대인의 생활문화와 현실적 상황에 맞게 재창조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발전함으로써 전통의 고유가치는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국의 역사왜곡의 하나인 한복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복생활'을 '일상에서 공감하는 문화재'로

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리브랜딩(rebranding)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⁵⁾ 리브랜딩은 한복에 대한 경험의 방향을 바꾸어 기존에 인지하고 있던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복은 특별한 날에나 착용하는 유물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개성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복생활이 현대적으로 계승되고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복의 전형성 즉 본질적 특징이나 고유 가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리브랜딩의 성공적인 사례로, 화장품 설화수는 블랙핑크 로제를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로 선정, 리브랜딩 전략을 설정하여 중장년층에서 청년층까지 타겟층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한복의 일상화에 적용한다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통해 콘텐츠 또는 광고를 제작하여 인플루언서 영향력으로 젊은 세대의 밴드웨건 효과(band wagon effect) 유도하는 것입니다. 인플루언서를 통한 콘텐츠 또는 광고 제작을 통해 “한복은 전통의상”, “한복은 불편해”라는 한복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시대에 SNS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젊은 세대(MZ)는 SNS의 주 사용층으로서 이를 가장 잘 활용하여 정보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주체입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디지털 소통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를 겨냥한 문화재정책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전승자의 의무적인 공연이나 전시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릉단오제와 같이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지역축제가 결합된 성공사례 확산 또는 지자체별 축제나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세계유산축전’, ‘한국민속예술제’와 같은 행사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결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로 63회를 맞이한 역사 깊은 ‘한국민속예술제’는 사라져가는 민속예술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화유산의 현재적 전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술제를 관람하는 관객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회 참여 단체들이 경연을 펼치고 이를 격려하는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진행하는 축제보다 더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민속예술제, 세계유산축전과 같이 한국의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행사들을 결합하여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축제로 재탄생하는 방향도 기대해봅니다. 이는 문화재 보존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5) 리브랜딩이란, 소비자의 기호나 취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의 제품이나 상표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활동을 뜻하며, 브랜드가 리브랜딩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브랜드가 제시하는 경험의 방향을 바꾸고,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 인식을 변화하기 위함.

[2-1 토론]

토론문

최연수
한국공예산업연구소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정책 방향

토론자 : 최 연수¹⁾

문화기본법은 문화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과진흥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권 확립을 바탕으로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며,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시할 목적²⁾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본 발제의 테마인 문화유산과 전통문화 분야를 이 법의 목적인 제1조(목적)에 적용해 보면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유산과 전통문화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바 본 질의는 이런 법의 취지를 근간으로 실제 문화유산과 전통문화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계획수립(법정, 비법정 포함)들과 개별법들과의 추진체계 관점에서 토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는 발제 배경에서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와 법정계획인 문화진흥기본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 문제를 특별히 제기하면서 ‘정합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과 실효성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한 점에 크게 공감이 간다. ‘정합성’이라는 개념 자체만 본다면 문화라는 시스템과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 간에 충돌과 모순 없이 잘 맞아 전체 시스템의 유효성을 극대화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 실제 문화분야의 다양성과 관점, 입장 차이 등으로 정합성을 이루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비전 및 비법정계획³⁾과 각종 개별법⁴⁾이 분법화 되는 양상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새로운 국정과제나 문화정책 방향을 흐드는 대내외적 환경변화까지 가세한다면 더욱더 정합성이라는 요구가 요원해지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발제자께서는 이에 대한 고견과 제기하신 정합성을 위협하는 요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둘째, 문화기본법은 2013년 12월 30일 제정되어 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 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단계지만, 문화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과진흥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제정·시행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법률이

1) 토론자 최연수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에서 공예 디자인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공예산업연구소 소장으로서 활동 중이며,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한 제2차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 수립 총괄 PM을 맡고 있음

2) 문화기본법(2013. 12.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3) 문화비전 2030,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2019), 포스트 코로나 문화유산 미래전략(2020) 등

4)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예문화산업진흥법 등

67개(문화재청 소관 법률 12권 별도) 중에서 43개 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법정위원회가 27개로 세분화⁵⁾되어 있어 문화기본법을 정점으로 하여 계획의 수립을 일원화하고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연구와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본다. 문화기본법이 제정되고, 1,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면서 과연 이러한 문화정책 추진 체계의 정비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 하는가?

셋째, 그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한다면, 현행 문화기본법 체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화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문화분야 법제 연구(2021)」 보고서에 의하면 ①문화정책 범주의 불명확성 ②문화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적 성격 무시 ③기본법과 개별법 간의 체계 부정합성 ④문화진흥계획의 위상 저하 ⑤문화정책 추진 체계의 부재 ⑥문화기본법의 위상 하락 등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발표자께서는 적합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졌다고 보는가? 여기에 빠진 진단과 처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넷째, 문화기본법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문화권’은 「세계인권선언(1948)」에서 밝힌 ‘문화적 권리’에서 시작되어 여러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만큼 문화산업 지원과 진흥과는 별개로 ‘문화권’은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반면 우리 헌법을 살펴보면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항목과 제1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서 어느 정도 ‘문화권’의 포괄적 근거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가령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점도 문화기본법의 위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이 든다.(※ 현재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라고 구체적으로 4가지 ‘문화권’을 규정하고는 있음) 발표자께서는 문화기본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화권’이 국제적인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하고 헌법에도 명시화되며, 실효성 있는 기본법으로서의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체계와 행정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가?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는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정책방향을 문화재, 문화유산 분야로 국한하여 발표해 주셨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공예분야나 전통건축, 전통복식, 전통한지, 전통음식 등 전통분야에서도 문화기본법과의 정합성 논란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에 입법 예고 중인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의원등 11인, 2021년11월 발의)>,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이병훈의원등 14인, 2020년 9월 발의)> 등의 개별법들이 끊임없이 발의되고 있고, 여기에 각종 계획수립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제 문화기본법의 ‘문화권’

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문화분야 법제 연구」, p1, 2021.

확립은 문화산업 진흥과 더 이상 별개가 아닌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함께 공존해 나가는 것이 발표자께서 주장하신 '정합성'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문화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위상을 다지고 다른 법정/비법정 계획들과 함께 문화진흥의 유기적이고 정합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귀한 발표와 자료를 준비해 주신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채경진 발표자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토론 의견을 마친다. 감사합니다.

[2-2 발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추진 방향

정창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포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추진방향

2022.12.15

정 창 호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정책혁신부장)

목 차

- I. 문화중심 지역균형 발전
- II.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문화정책
- III. 유사재난 대비 안전한 문화기반 조성

I. 문화중심 지역균형 발전

1. 문화기본법과 문화진흥기본계획 주요내용
2. 지역문화정책 관련 기존 계획 환류
3. 문화중심 지역균형 발전

1. 문화기본법과 문화진흥기본계획 주요 내용

문화의 정의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
국민의 권리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표현과 활동에 차별이 없이(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할 권리 / ②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 ③ 문화를 향유할 권리
국가의 책무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정책수립, 재원확충, 효율적인 운영(1항) • 지자체 문화관련 계획, 시책, 자원을 존중,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균형잡힌 문화발전) • 문화소외계층, 문화활동 장려를 위한 필요시책 마련
국가와 지자체 문화정책수립·시행상 기본원칙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 문화의 창조성 확산 • 국민과 국가의 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여건 조성 • 문화활동 참여, 문화교육의 기회 확대, 문화창조의 자유가 보장 • 차별없는 문화복지 국가 • 문화가치 존중,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 문화의 국제교류·협력 증진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중앙기관과의 협의(제2항) •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문화발전의 목표와 방향 / 문화정책 기본방향 / 문화진흥 법령, 제도마련 등 기반조성 / 9조 각 호 사항(11개)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문화권 신장 -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 /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 /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 /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 /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 /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지역문화정책 관련 기존 계획 환류

1. 제 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중 주요 지속추진 필요과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추진과제 전문가 성과진단결과)
 - 인문정신문화 진흥 / 문화소의계층 대상 문화복지 강화 / **참여·체감형 문화향유 환경 조성** / 문화인력 육성 및 연구강화

2. 제 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발췌)

성 과	한 계
1. 지역주민 문화향유 기반 확충 2. 문화재생 확대 및 문화도시 조성 본격 착수 3. 지역의 문화 기초역량 강화 지원 4. 생활문화 동호회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 안착	1. 지역간 문화 격차 상존 2. 지역문화 협치구조 및 자율성 한계 3. 지역문화의 회일화 및 일상 속 문화 참여 부족

≫ ≫ #격차 해소 #자율성 확대 #다양화 #참여 강화

- (참고)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기본원칙

문화기본법(제5조)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1. 문화의 다양성 과 자율성 , 문화의 창조성 확산 2. 국민과 국가의 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여건 조성 3. 문화활동 참여 , 문화교육의 기회 확대, 문화창조의 자유 보장 4. 차별없는 문화복지 국가 5. 문화가치 존중,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교류·협력 증진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와 지역문화 다양성 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 5 -

3. 문화중심 지역균형 발전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기반조성

1. (법제도) 문화정책이 지역발전과 연계가능한 가능한 기본적 여건 조성

추진방향 : **같아야 할 것은 같게(격차해소, 기본여건 조성), 달라야 할 것은 다르게(다양성, 지역의 특수성)**

≫ 지역문화의 창조성, 자율성과 다양성이 발현될 수 있는 최소 유무형 인프라 조성

- (1) 지방분권법-국가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마련에 따른 문화분야 대응 : 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 + (문체부) 부문별 계획 >> 양방향식 종합계획으로 **문화분권**과 **균형발전** 간 시너지 창출 대응 필요

- (중앙) 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노동부 등 부처 간 문화정책 추진체계 협업 활성화
 - 지역 연관 정책에 문화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관점에서 검토
- (중앙-지역) 지역이 참여하는 정책협의기구 기능 확대
 - 전국 시도 문화국장 회의(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정기 의제화 등 지역 간 균형성 확보
 - 광역, 기초 문화재단 등 유관기관 협의체 소통 확대
- (지역 간) 시, 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등 지역 간 문화정책 협의기구 활성화

- 6 -

3. 문화중심 지역균형 발전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기반조성

(2) 지방이양사업 연착륙 장치 마련 : 사무이양이 곧 문화분권? 중앙의 역할 모색

- (사후실태조사) 문화분야 지방 이양사업 지속, 확대, 폐지 등 사후관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정보교류 및 학습) 지역별 문화정책 추진 관련 투입 예산, 인력, 조직, 사업설계 등 공통운영 체계 공유로 지역 간 격차 해소
 - 지역 간 문화정책 흐름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확대(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 (보충성 강화) 지역 간 경합하는 공모방식이 아닌 격차해소, 지역특수성 고려 등 필요한 곳에 지원가능한 지정방식, 포괄보조 등 지원방법의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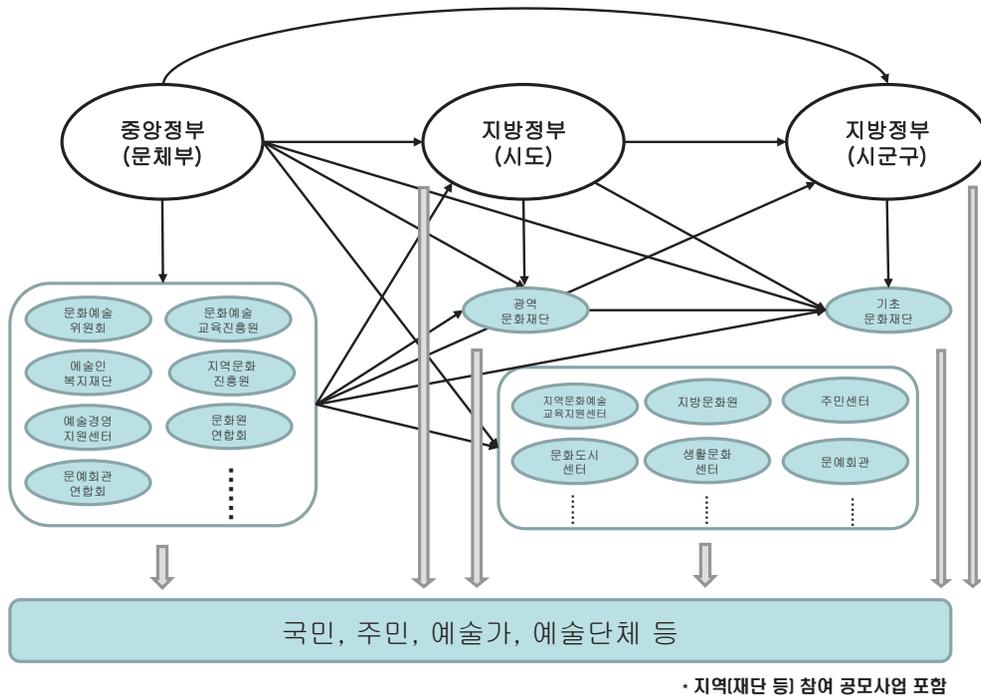
(3) 민간재원 확보

- (민간후원 활성화) 문화분야 기부금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선(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매개인력) 후원매개인력 양성(민간기획자, 문화예술관계자 등) 강화 및 지역문화재단 등 유관기관 파견 지원
- (예술의 가치 확산) 지역의 문화예산 관심과 지키기, 전국민의 문화적 관심을 끌 수 있는 국가차원의 "문화예술옹호활동" 강화

(4) 자치분권을 고려한 문화정책 전달체계 개선

- 중앙정부, 예술위,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원, 지역문화진흥원, 문예회관 등

3. 문화중심 지역균형 발전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기반조성



3. 문화중심 지역균형 발전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기반조성 III. 문화재 관리 실태조사

2. (참여) 문화가 스며드는 삶, 일상의 문화로 생동하는 지역 만들기 (주민주도)

- (1) 문화향유 시설 건립중심에서 활용 확대 방안 모색 병행
 - 노후시설 체계적 유지보수 + 주민 중심 활용방안 확대 방안 강구
 -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의 거점별 집중 지원, 접근성이 좋은 기존 공간 재활용(필요시 공간 확대)
 - 시공간을 탈피한 문화활동 제공 기반 조성(디지털화, 온라인,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필요,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등)
 - 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가동률 : 평균 13% (2021 공연예술 실태조사), 문예회관 이용률 : 1.4% (2021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cf) 타 공간 이용률 : 주민자치센터(21.5%), 도서관(9.7%), 박물관(4.5%), 민간공연장(4.1%) / 생활문화센터(0.5%), 문화의 집(0.2%)
- (2) 지역의 고유문화 발굴 → 공유 → 확산
 - (주체성 강화) 표현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 동호회 > 스스로 문제 발굴, 함께 고민하고 활동하는 주체적 문화 공동체 활성화
 - 문화공동체 참여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목적** 프로젝트 지원 확대 (우리동네 문화 유산을 활용한 스토리 있는 <우리 마을 만들기>)
 - 사회적 가치와 연계 가능한 주제, 문제해결형 참여프로그램 활성화(마을단위 주민참여 제안 공모제 실시 등)
 - (매개인력) 문화기획자 등 문화인력이 다양한 니즈를 갖는 동호회와 매칭, 지속적으로 재미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성화 방안 강구
 - 지역문화 동호회를 이끌 퍼실리테이터 양성 및 지원 체계 운영
- (3) 새로운 문화프로그램 등 종 다양성 확보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 지역별 고유문화발굴을 위한 (사례) 교육 등
 - 인문정신문화 교육 강화 : 인문의 가치가 개인의 소양과 더불어 지역공동체 형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확대
 - 전국단위 공유체계 및 상호학습 계기 마련 > 지역발전과 문화다양성 연계

3. 문화중심 지역균형 발전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기반조성 III. 문화재 관리 실태조사

- (4) 지역의 고유문화를 발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연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 유관기관 간 관계조정, 역할 및 정체성 정립
 - (예) 지역문화재단(문화프로그램 기획, 집행), 지방문화원(향토문화 발굴, 보존, 활용), 생활문화센터(생활문화 활동 지원)
- (5)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도로 분산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간 문화 연계성 확보 (행안부, 국토부 협조)
 - 이전 공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시도 혁신도시 단위의 문화분야 공동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문화가 숨쉬는 지역상생 사업 추진, 공공기관 평가 반영 연계 등
- (6) 지역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강화
 - 지역예술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 : 공공지원 등에 관한 정보 부족 / 창작활동 공간 부족 / 도전기회 부족 / 네트워킹 부족
 - 정보제공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확대 운영 및 홍보강화 : 예) 아트누리(공공기관, 지역재단 등 공공지원 관련 정보를 통합한 플랫폼)
 -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한 예술창작공간 지원 육성, 유동인구가 있는 공공시설에 작품 전시공간 제공
 - 시민문화, 생활문화 활동 대비 전업 예술가 지원 비중 축소 경향 : 문화예술 예산 중 최소 일정 비율 이상은 전업 예술가 지원으로 활용
 - 지역 간 예술가들의 협업 공동 프로젝트 추진 시 지자체 간 보조금 공동 지원 방안 검토
 - 문화예술 종사자 네트워킹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 지원

IV.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문화정책

본 장의 발제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후변화 대응에서 문화예술적 접근의 방향성 연구' (나혜영, 2022)의 ppt 발제문을 인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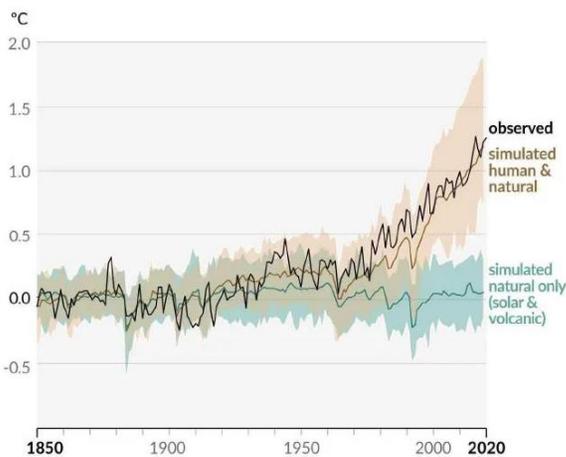
1. 기후위기 아젠다로 본 문화정책의 환경변화
2. 기후변화와 문화예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 동향과 사례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과제

1. 기후위기 아젠다로 본 문화정책의 환경변화

III. 문화재 관리 실태조사

'명백히 인간에 의한' 전례없는 기후변화... 곧 1.5도 상승 가능성 ↑

최소한 탄소중립(넷제로) 반드시 필요



<https://m.khan.co.kr/environment/climate/article/202108091700001#c2b> (경향신문, 2021.8.9)

- 2016년 11월, 196개국 참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협정 비준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20.1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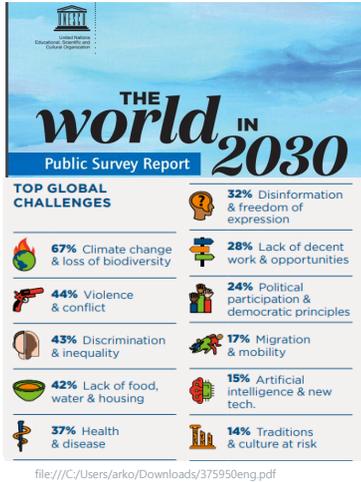
제3조(기본원칙) 총 8개의 기본원칙 제시

1. 미래세대 생존 보장을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
3.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 수립
7.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 아젠다로 본 문화정책의 환경변화



UNESCO 'The World in 2030' 설문조사(2020.5~9)

-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 도전에 대한 일반대중의 의견과 이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해결책을 모색, 유네스코 22-29 중장기전략(향후 10년 로드맵) 수립에 활용

• 주요결과

- 2030년까지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당면한 4대 도전 과제:

①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② 폭력과 갈등, ③ 차별과 불평등, ④ 식량·물·주택 부족

-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로 인해 초래될 위험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가 높게 나타남

- 주요 과제의 해결책으로 그린(친환경) 솔루션에 대한 투자,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 국제협력

증진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2. 기후변화와 문화예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화예술의 의미 찾기 →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의 의미 탐색

- 「성장의 한계」(1972), 「우리공동의 미래」(1987)→Sustainable Development(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성장) 제시
- UNCED 'Earth Summit'(1992)→SD를 글로벌, 국가, 지역의 발전 원리로 채택: Rio선언, Agenda21 등
-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2001)→'문화'를 지속가능발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 ↳ 문화는 사회·물리적 환경(자연환경, 건조환경)을 특징짓는 주체이면서 창의성, 다양성, 표현의 자유 확대에서 중요
- UN(2008)→기후변화, 도시화, 빈부격차 등의 현 상황에서 경제, 환경, 정치,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균형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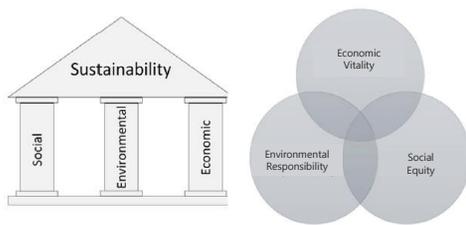


Figure 1.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컨셉
A depiction of the three pillars of sustain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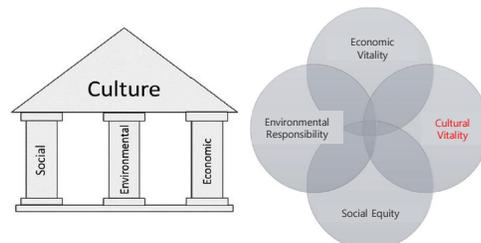


Figure 2. 사회, 환경 경제와 동등하게 문화적 중요성이 강조된 개념도
A depiction of the four pillars of sustainability

Kirsten Loach et al.(2017). *Cultural sustainability as a strategy for the survival of museums and libra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3(2) pp.189.191

2. 기후변화와 문화예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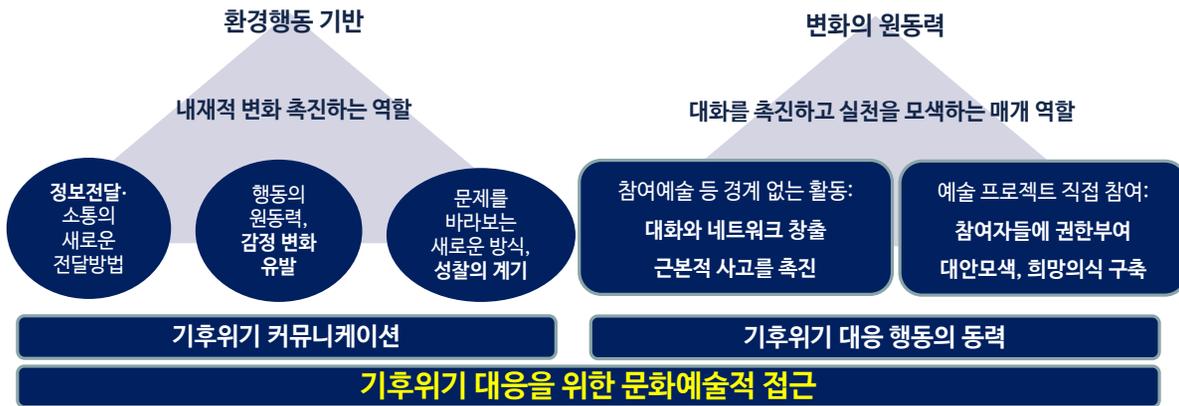
- 기후위기 대응(적응)에서 문화예술적 접근의 잠재력 (정보전달, 공감대 형성, 지속가능발전 내재화)

"과학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지금, 진보를 위한 열쇠는 우리의 심리적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다..."

(Rebecca Huntley, 2020, Stop making sense: why it's time to get emotional about climate change, The Guardian 인터뷰 중)

기후위기에 대한 인지와 환경 행동의 기반

환경적 실천과 창의적 대안을 이끌어내는 플랫폼



15

2. 기후변화와 문화예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의 4가지 전략

주요 전략	문화정책 역할	개념	예시
문화적 관행과 권리를 보호하고 유지	규제자 보호자 Regulator and Protec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 가치와 다양성의 지속가능성 유지에 초점 개인과 단체가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창조로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옹호 	문화 접근성 및 참여, 다양성 향상 사업
지속가능성 인식제고 및 촉매	촉진가 Animator and Cataly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화를 위한 과정에서 예술적 표현과 역할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사고와 행동 양식으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 문화분야 행위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환경문제, 사회적 위기 등에 대한 인식과 행동 변화에 영향 	지속가능성 주제 연계 예술활동 지원
글로벌 차원의 생태적 시민의식 육성 및 대안 모색	교육자와 지지자 Educator and Promo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의의 의미에서 문화는 자연·환경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에 착안 문화정책은 '상상된 공동체'(글로벌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글로벌 문제로 파악하고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지역-글로벌 네트워크 프로젝트, 교육 지원 (생태예술 교육 등)
문화(창조)산업 부문 녹색화(Greening)	통역자과 정치가 Translator and Politic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단체 및 산업들의 운영과 영향(impact)이 녹색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 문화적 행위자들이 환경정책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시키고 문화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 	예술기관(단체) 운영 및 예술활동에서 탄소배출 감축 의무화 및 지원 (자원, 정보, 컨설팅 등)

Nancy Duxbury et al., (2017), Cultural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ur strategic path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ume 23 참고하여 재작성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 동향과 사례

초국가적 문화예술 이니셔티브

EU "New European Bauhaus(NEB)"

"차세대 EU가 유럽 개혁의 물결을 일으키고 EU를 순환경제의 리더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환경이나 경제프로젝트가 아닌, 유럽을 위한 새로운 문화 프로젝트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위원장(2021.01.18)

• 개요

- EU Green Deal의 문화적 차원, 모든 유럽인이 아름답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협업을 촉진하는 프로젝트
- 과학, 기술, 문화, 예술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공동 창작을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을 찾는 새로운 접근방식

• 목표 및 의도

-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접근성 개선이 아닌, 역량 강화와 능력을 설계
- 단순한 수리가 아닌 순환의 과정을 채택, 치유·번영·재생을 추구
- 취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살고 싶은 세상으로의 공정한 전환 추구

• 추진방안

- 1단계: NEB 컨셉 및 사례 모음(~21.8)
- 2단계: 네트워크 및 지식공유(21.9~)
- 3단계: 아이디어와 실천 확대(23.1~)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 동향과 사례

기후축제

ArtCop21 Festival

-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적극적 활동을 촉구(2015.9~12)
- 54개국 250명 예술가 참여, 551개 이벤트, 약 10만명
- 기후인식 전환 및 변화촉구 효과(Sommer 외, 2019)
- 후원: 파리시청, 영국 예술위원회, 민간부문



스코틀랜드 기후 페스티벌

- COP26과 연계, 사람들이 기후 비상상태의 규모와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지역사회 주도로 기후인식과 행동을 장려하는 지역-기후 행사 추진(21.11~22.3)
- 지역 커뮤니티의 기후대응 인식과 역량 강화 등
- 소규모 조직·단체의 커뮤니티 기후 이벤트 100-500파운드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 동향과 사례

예술+비에술 프로젝트

자연자원보존협회 예술인 레지던스

- 미국 NRDC는 예술가와 창조적 실무자(건축, 디자인 등)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공공 담론에서 환경이슈를 높이고자 Artist in Residence를 운영(2014)
- 사례: (Jenny Kendler) 90%가 감소한 왕나비의 개체수 감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책변화와 시민행동을 자극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프로젝트를 진행



Milkweed Dispersal Balloons

Birds Watching 조형물

EARTH SPEAKER App

- 개요: Olafur Eliasson이 지구환경에 대한 어린이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구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참여하고 어른들(의사결정권자, 글로벌 리더)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앱 개발
- 권한 부여와 연대를 위해, EU24개 언어로 접근 가능(무료)
- 참여: 예술가+연구자-전문가그룹 협업으로 진행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ufuqKULtml0>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 동향과 사례

공공예술 프로젝트 '기후시민 3.5'

-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예술 캠페인
- 인구의 3.5%가 행동하면 사회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연구에서 착안,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 및 대응 의지 촉발하고 캠페인 참여 유도
- 시각, 건축, 디자인 등 예술인, 연구자, 국내외 시민단체, 환경단체,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8개 분야에서 기후위기 캠페인 및 대응 촉구(120여개 활동: 예술활동, 캠페인, 연구, 출판 등)
- 추진단체: (기획) 이해원(대진대학교),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1. 기후도시 : 범시민 기후위기 캠페인 및 비전 제시



2. 기후교실 : '기후시민되기' 축구 프로그램



3. 기후발상 : 기후위기 문제 인식 및 대안 모색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 동향과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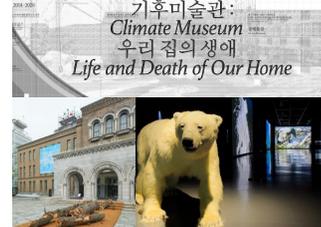
4. 기후캠프 : 기후문제 직접 체험 프로그램



5. 기후극장 : '기후시민되기' 축구 프로그램



6. 기후미술관 : 주거문화와 기후위기 주제 전



7. 기후제주 : 기후위기 대응 지역 활동 소개



8. 기후글로벌 : 기후위기 3.5의 글로벌 캠페인



[2022년 근황]

- CSO에서 만든 동화책
⇒ 서울시내 50여개 초등학교에서 교재로 사용
- 어린이 바다 그리기 대회 지속 개최
⇒ 2022년 약1700여명 참여, 그림책 5권 출판
- 기획자 관련 활동 지속
⇒ 5차 광주폴리 큐레이터로 참여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기획: 이해원), 2021, 「기후시민 3.5」.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 동향과 사례

문화예술부문의 탄소측정 도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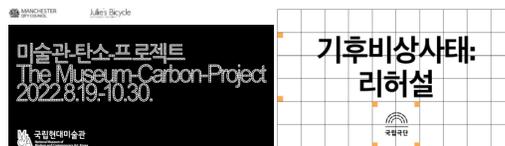
- 문화예술 부문에서도 실질적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이 존재 (활동별 배출량 문화시설(90%)사무실)투어)제작 및 실행사 순, ACE 2015)
- 문화부문의 환경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탄소측정 도구 활용 증가
- Creative Green Tool : 영국 비영리단체 Julie's Bicycle이 문화예술 부문을 고려한 환경 측정 도구를 개발 (2007~)
 - 문화시설 및 단체들을 위한 탄소 계산 프로그램으로(무료), 장르별, 시설별 전기, 가스, 물, 폐기물, 출장, 관광 부문 탄소배출 측정
 - 현재 ACE를 포함하여 50개국, 3,200개 이상의 문화예술 단체 사용

<Creative Green Tool을 활용한 공연장 탄소배출 측정사례>

탄소 발자국	단위	기준년도 2011/12	전년도 2014/15	현재년도 2015/16	전년도 대비 변화율(%)	기준년도 대비 변화율(%)
전기	tonnes CO2e	283	301	277	-8%	-2%
가스	tonnes CO2e	110	90	85	-5%	-22%
물	tonnes CO2e	1.4	1.3	1.0	-23%	-26%
폐수	tonnes CO2e	2.8	2.7	2.1	-23%	-26%
폐기물	tonnes CO2e	20	0.0	0.0	-	-100%
재활용	tonnes CO2e	1.2	0.8	0.7	-5%	-38%
출장	tonnes CO2e	Not data in 2011/2012	4.9	17.0	244%	-30%
탄소발자국 총량	tonnes CO2e	419	401	383	-4%	-8%
상대적 탄소발자국 총량	performance	2584	1535	1566	2%	-39%

출처: Julie's bicycle(2016) Young Vic 2015/2016

문화기관, 예술활동 탄소저감 가이드북 개발



- 전시, 공연, 축제 등에 활용 가능한 탄소배출 저감 가이드북-툴킷 개발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 동향과 사례

(시사점)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화예술의 의미와 역할 찾기 시도 확대 중

1. (구체화)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화의 의미, 역할, 적용을 구체화하는 활동 확대
 -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 기후위기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플랫폼
 - 문화예술부문 탄소배출 저감
2. (확장) 기후위기(환경) 주제접근 + 장르 예술활동 ⇒ 참여와 관계맺기
 - 장르 융합, 예술+비예술, 주제 확장(기후정의), 주제+활동방식, 문화부문+타부처 연계 등
3. (정책화) 지역-국가-초국가적 차원 : 기후위기 대응 및 전환에서 문화정책 주목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과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부문 주요기반 및 국내현황		
구분	주요내용	국내현황
기후정책과 문화정책의 접점	새로운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문화예술적 접근	(주제) 기후위기 주제 전시/공연/축제 등 주제접근 (방식) 축제부문의 탄소저감 도입 빠르게 진행 → '기후' 아젠다 의미화 및 시도의 기회 제약
	기후위기를 감각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참여를 증진시키는 과정이자 결과	공공예술 프로젝트 → 일회성, 제한적 사업, 사례공유·확산 부재
문화예술계 기후적응	문화예술에 적용 가능한 탄소배출 측정 툴 및 사용매뉴얼	전시부문 일부 시도
	문화예술 탄소발자국 저감을 위한 장르별·분야별 가이드북(툴킷)	일부 번역, 접근성 한계, 시각부문 자발적 모임 전시부문 지속가능 매뉴얼(아르코미술관, 내부적용) 공연/전시 지속가능 안내서 제작중 해외 가이드북/툴킷 한국판 발간 추진
	예술활동 재료 공유·재활용을 위한 온·오프라인 인프라	민간부문 제한적(비활성화)
	Green Art 지원을 위한 전문조직 예술활동 탄소저감을 위한 정보공유, 컨설팅, 전문인력, 재정지원	(축제부문을 제외) 거의 부재
	문화예술계의 기후문해력 및 역량 강화 기후-예술 동료만들기, 기관-현장 연계협력	공공부문 부재 예술가들의 자발적 시도 확대 경향
	문화예술 공공부문 환경계획 수립 등 기후 아젠다 반영	ESG로 제한적 접근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화시설의 역할 논의 제한적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과제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적 접근 : 문화정책의 접목가능성 고민 필요

- 문화부문 예산 외 기후위기 전략 계획 예산에 문화 계획을 포함
- (보다 적극적인 관점)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후 위기 대응 문화적 이니셔티브’ 선언 및 사업화

2. 기후위기 관련 문화정책의 확장성 시도 : 정책목표의 확장, 영역의 확장, 장르와 기존 고정적 형태의 경계 허물기

- 시민들의 참여와 대안을 발굴해보는 시도 : 다양한 주체와의 관계맺기(예술+비예술+주민+행정+정치...)
- 예술적 관점의 새로운 소통, 높아지는 관심속에 새로운 참여 주체 지속 발굴 등 파트너십 확대
- 전문지원조직과의 협력을 위한 기후-예술 전문성과 협업 역량 중요

3. 기후(환경) 리터러시 문화예술계 역량강화 : 기후(환경)문제에 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강화 프로그램 확대

4. 기후위기 대응은 결국 튼튼한 지역문화가 전제 : 문화적 역할 관점에서 기존 지원방식(장르, 기능중심,
1회성, 단년도, 결과물 중심, 개인적 활동) 등 사업설계 검토도 일부 필요

5. 공공 문화시설(공간) 활용 :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공공 문화시설 역할, 시설운영, 프로그램 시도로 참여 활성화

- 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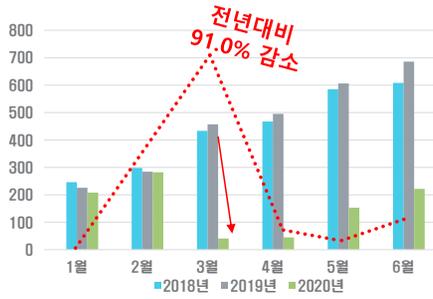
III. 유사재난 대비 안전한 문화기반 조성

1. 감염병 재해가 문화예술정책에 준 교훈
2. 유사 재난 발생 대비 준비해야 할 것들

1. 감염병 재해가 문화예술정책에 준 교훈

1. 코로나 19가 문화예술계 미친 영향 → 대면을 본질로 하는 문화예술분야 활동 급격히 감소

공연건수 변화 추이(서울+대구)



※ 점선은 신규 확진자 수 발생 추이

전시건수 변화 추이(서울+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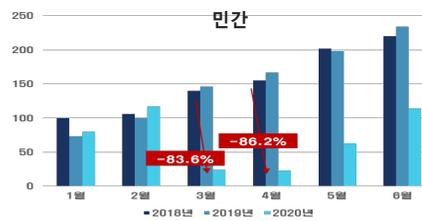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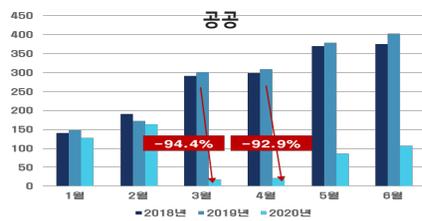
※ 점선은 신규 확진자 수 발생 추이

출처 : 권용민(2020) 코로나 19, 예술현장의 위기양상과 특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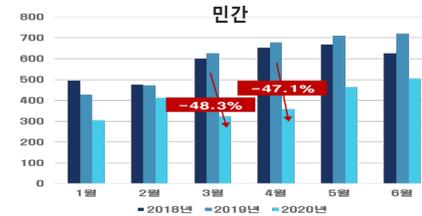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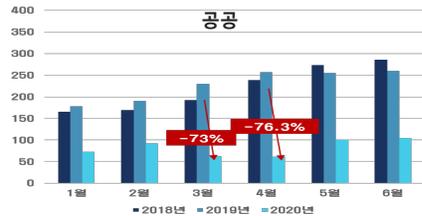
1. 감염병 재해가 문화예술정책에 준 교훈

1. 코로나 19가 문화예술계 미친 영향 → 공공이 민간보다 더 급격히 감소

<코로나19 전·후 운영주체별 공연 건수 변화>



<코로나19 전·후 운영주체별 전시 건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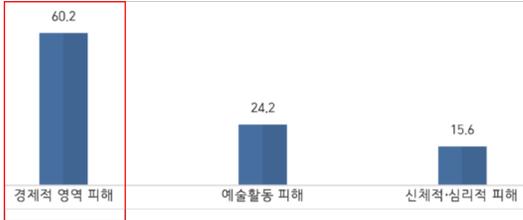


출처 : 권용민(2020) 코로나 19, 예술현장의 위기양상과 특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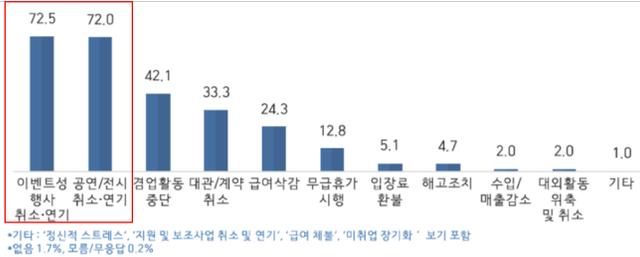
1. 감염병 재해가 문화예술정책에 준 교훈

1. 코로나 19가 문화예술계 미친 영향, 문화예술분야 활동 급격히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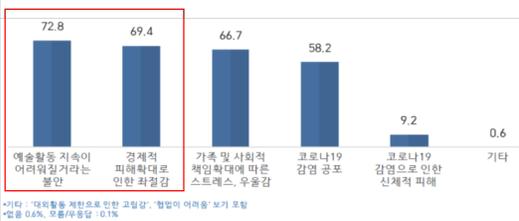
(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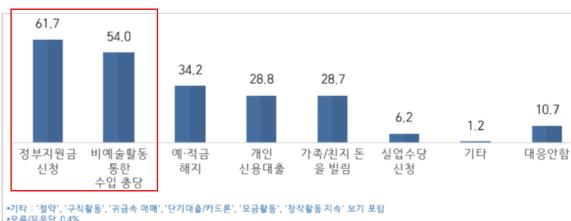
(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양상(복수응답, %)



(3) 코로나19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피해(복수, %)



(4) 경제적 피해 대응(복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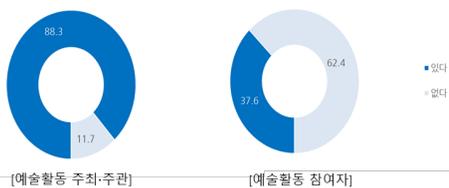


출처: 조강주(2021) 코로나19 이후 유사재난사태 대비를 위한 예술계 공제기능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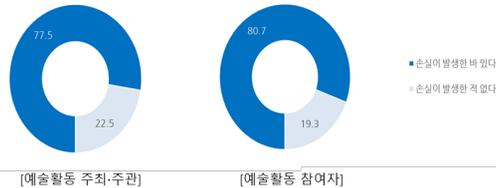
1. 감염병 재해가 문화예술정책에 준 교훈

1. 코로나 19가 문화예술계 미친 영향, 문화예술분야 활동 급격히 감소

(1)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취소·연기 경험(%)



(2) 예술활동 취소·연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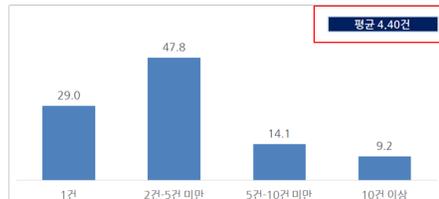


(3) 주최·주관자 기준 예술활동 취소·연기 건수(%)



[N = 1,258명 (코로나19 기간 예술활동 주최·주관 경험자 중 취소, 연기 경험자)]
※ 2020년 2월~2021년 11월 조사시점까지의 경험을 의미
※ 주최·주관자 중 예술단체 대표는 평균 5.85건, 개인은 4.17건 경험

(4) 참여자 기준 예술활동 취소·연기 건수(%)



[N = 404명 (코로나19 기간 예술활동 참여자 중 취소, 연기 경험자)]

출처: 조강주(2021) 코로나19 이후 유사재난사태 대비를 위한 예술계 공제기능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감염병 재해가 문화예술정책에 준 교훈

① ②

2. 지역별 문화예술활동 건수 비교

〈17개 시도별 공연예술 활동 건수〉

지역	시각 예술	2020년 공연예술						계	2019년 계	작년 대비 증감률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소계			
서울	2,110	184	1,842	1,042	173	188	3,429	5,539	13,863	-60.0%
부산	369	44	328	159	49	54	634	1,003	2,972	-66.3%
대구	322	63	382	151	55	66	717	1,039	2,557	-59.4%
인천	166	10	180	59	20	32	301	467	1,731	-73.0%
광주	241	25	173	101	16	47	362	603	1,661	-63.7%
대전	96	32	232	53	11	37	365	461	1,563	-70.5%
울산	133	12	119	47	18	13	209	342	808	-57.7%
세종	16	6	27	14	4	14	65	81	188	-56.9%
경기	836	63	438	220	44	123	888	1,724	5,955	-71.0%
강원	219	28	129	82	25	47	311	530	1,880	-71.8%
충북	189	21	81	67	8	30	207	396	1,110	-64.3%
충남	166	11	80	73	6	22	192	358	1,247	-71.3%
전북	394	89	187	92	33	73	474	868	1,857	-53.3%
전남	264	17	59	46	10	33	165	429	1,493	-71.3%
경북	345	22	132	87	14	54	309	654	1,481	-55.8%
경남	312	18	193	116	28	35	390	702	2,705	-74.0%
제주	201	0	47	15	3	6	71	272	1,112	-75.5%
계	6,379	645	4,629	2,424	517	874	9,089	15,468	44,183	-65.0%
평균	375.2	40.3	272.3	142.6	30.4	51.4	534.6	909.9	2,599.0	-
표준편차	481.1	44.7	420.9	237.7	40.0	44.7	778.1	1,252.0	3,160.5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예술활동 건수〉

구분	시각 예술	2020년 공연예술						계	2019년 계	작년 대비 증감률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소계			
수도권	3,112	257	2,460	1,321	237	343	4,618	7,730	21,549	-64.1%
비수도권	3,267	388	2,169	1,103	280	531	4,471	7,738	22,634	-65.8%
계	6,379	645	4,629	2,424	517	874	9,089	15,468	44,183	-65.0%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1) 2020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3. 시사점

- 감염병 장기화에 대한 문화예술 대응 준비 부족
-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화공간 운영 등 공공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접근
그리고, 그 피해는 예술가들에게.....
- 특히, 지역별 공공 공연장, 전시장 등의 운영 대치는 지역마다 상이 (제각각), 지역적 상황, 책임회피, 정치적 부담 등 적극적 예방차원 접근
- 앞으로도 이런 사건은 반복될 가능성은 농후한 상태

2. 유사 재난 발생 대비 준비해야 할 것들

1. 유사재난 발생시 적용가능한, 비상체계 대응으로서 문화방역 거버넌스 체계 준비

- o 감염병 상황 대응=비상체계 전환, 위기대응 체계로서 일정 기간 매뉴얼에 따른 준비된 방식으로 대응
- o 문화예술분야 위기대응 콘트를 타워 체제 구축 : 중앙-지역(시도), 공공기관, 외부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
- o 문화·예술 현장의 실태파악, 의견수렴, 지원방안 수립 등 위기상황에서 유효한 정책 수단과 사회적 프로그램 연구 개발
- o 규정과 절차에 근거한 의사 결정과 신속한 집행 체계 구축

2. 재난과 위기 발생시 공공지원, 문화공간 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 준비

- o 인공호흡이 필요한 영역에 빠르게 산소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
- o 지원사업 운영방식의 대응력과 탄력성 강화 : 위기상황 발생 대비 대안적 시나리오 수립
- (예술위 2020) 보조금 운영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보조금 관리지침대로 집행 불가, 모두 사업포기를 받나?
- (지역) 문화시설 운영 여부를 자의적으로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

3. 문화, 예술분야 현장 피해를 신속히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정보 시스템 가동

- o 활동분야, 지역별, 연령별, 활동방식 등 가급적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공유 체계 필요

4. 전시장, 공연장 접근의 불안요소 등 부정적 시그널을 거둬주는 조치

- o 공연장, 전시장 운영에 관한 안전수칙, 공간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개
- o 공연장, 전시장은 무사고, 어느 공간보다도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신뢰의 메시지 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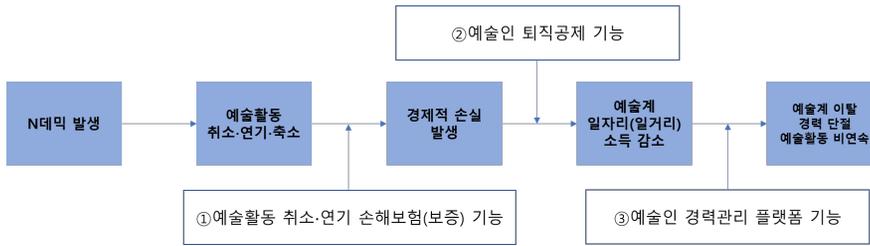
2. 유사 재난 발생 대비 준비해야 할 것들

5. 공연장 공연 취소, 연기, 폐쇄 등에 따른 예술단체 보호제도 마련

- 사전제작, 준비과정에 대한 보상, 공모지원사업 등 보조금 운영규정의 유연한 적용
- (2020 예술위) 보조사업자 매뉴얼 제작 배포 / 공연 취소, 사업취소 시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인정 및 정산방침 등 마련 / 국제교류 지원 인정범위 확대
극장 대관료 전액 환불, 기획공연 취소시 공연비 전액 지급 / 공공시설 방역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등

6. 예술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완충 지원제도 : 예술인 공제기능 검토

- 예술활동 취소/연기에 대한 손해보험 필요성(88.6 % 필요), 손해보험 가입의사 (64.8% 가입) [N = 2,500명] (조강주, 2021)



7. 생태, 기술 등 융합적 예술활동 지원 활성화

- 사회변동에 문화, 예술이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실험할 수 있는 예술활동 지원사업
- 기후위기, 기술변동, 고령화 등 사회변동에 반응하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예술활동 사업화
- 기타 예술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속적인 창작활동 조성

감사합니다

[2-2 토론]

토론문

손도연
중도일보

충청북도 판소리의 경쟁력은?

글/손도연 중도일보 기자

-
1. 판소리의 원류는 충청도다
 2. 충북 진천군 명창 김봉학…진천군은 전통음악과 밀접한 지역
 3. ‘판소리의 아버지’ 염계달, 음성 가섭사서 10여년간 독공
 4. ‘어전광대’ 최낭청…‘석화제의 달인’ 김제철 명창도 충북 증평·괴산군 태생
 5.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고수’ 청주출신 이창명 명창과 박팔괘
 6. 국악계 큰 어른 ‘박팔괘’, 말련에 굶어 죽었다…단독 인터뷰
 7. 제천 청풍승평계의 발굴 의미와 국악계 평가
-

2023년, 우리나라 전통소리인 판소리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벌써 20년째다. 그러나 판소리는 현재 대중화에 다가서지 못하고 수백년 전,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 정부나 자치단체는 판소리 등 국악 등에 관심 밖이다. 2021년 3월부터 충청도 전통소리의 가치를 재조명할 시리즈, [‘10년간의 취재 기록’…판소리의 원류는 충청도다]를 기획 보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기획 시리즈는 모두 100회가량 지면과 인터넷 등을 통해 연재되고 있다. 특히 이번 기획 시리즈는 ‘K팝과 판소리의 대중화’ 및 ‘판소리 전라도 동·서편제와 충청도 중고제와의 관계’, ‘충청도에서 활동한 판소리 명창은 누구인가’, 그리고 ‘판소리 고향은 실제 어느지역인가’ 등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충청도민들의 삶이 닮아있는 판소리 중고제. 중고제는 판소리의 원류라고 해도 과언이다.

‘충청도-판소리’와 관련된 대체적인 시각은 어떨까. 대중적인 평가는 먼저 ‘불모지’를 떠올릴 것이다. 특히 충청지역 중에서도 충북지역은 ‘불모지 중 불모지’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충북지역은 실제 판소리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일까. 또 판소리 명창은 없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절대 아니다’다. 초기 판소리 명창은 충청지역 뿐만아니라 충북지역에서도 활동했다. 또 우리나라 판소리 역사 중에서도 최고의 명창은 충북 출신이고, 근거지를 충북지역으로 삼았던 명창도 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초기 판소리 명창은 충청도에서 많은 활동을 이어갔는데, 특히 충남 서산지역 등은 초기 판소리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런 점에서 충북지역도 분명, 영향을 끼쳤다.

◆충북 진천군 명창 김봉학…진천군은 전통음악과 밀접한 지역

대표적인 예가 충북지역 판소리 명창 ‘김봉학’이다. 김봉학의 고향은 ‘충청북도 진천’

이다. 김봉학 명창과 관련한 얘기는 '조선창극사' 등에서 언급됐다. 1939년 3월 21일자 조선일보는 판소리 명창 이동백(1866년~1949년)과 관련한 얘기를 다루면서 이동백 명창의 가문이 충북 진천에서 '세거', 즉 충북 진천에서 대대로 살았다고 기록했다. 정노식 저서 '조선창극사'(1940년)도 이동백 명창이 김봉학에 대한 증언 내용을 글로 표현했다.

당대 판소리 최고의 명창인 이동백이 김봉학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봉학과 직접 관련된 실증자료는 거의 없다. 이동백이 인터뷰 등을 통해 전한 게 김봉학과 관련된 기록이 전부다.

충북 진천은 이동백 명창의 수행고수 강경수가 살았던 지역이다. 수행고수는 특정 명창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명창의 장단을 집중적으로 찻던 고수를 말한다. 진천 김봉학 명창과 호걸제에 대한 연구는 2019년 노재명 판소리학자의 논문(충청북도 호걸제·중고제 판소리의 원류와 미래) 등에서 본격화 됐다.

충북 진천은 우리나라 전통·현대 음악과 관련해 매우 역사 깊은 지역이다.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농요'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11호로 지정돼 있다. 진천 용몽리 농요는 덕산면 대월들·목골들·옥골들 일대에서 논농사를 하며 전래한 전통 농요다. 이 농요는 원형을 잘 보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락 음악의 대부인 신중현 씨의 본적도 충북 진천이고, 신중현 씨 부친의 고향도 이곳이다. 이런 점에서 진천지역은 예인들과 매우 밀접한 고장이다. 그러나 진천군은 김봉학 명창과 관련한 역사적 근거를 알지 못하고 있다. 군은 덕산면 용몽리 농요만 계승·발전시킬 뿐, 김봉학 명창은 다른 지역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판소리의 아버지’ 염계달, 음성 가섭사서 10여년간 독공

충남지역이 우리나라 '판소리 초기'를 주도했다면, 충북지역은 '판소리의 아버지'를 길러냈다. 굳이 비교하자면 서양음악의 아버지 '바흐'같은 존재를 충북이 보유했던 셈이다. 독일 음악가 바흐는 현재, 서양 음악의 발전과 기초 등의 초석을 다졌던 인물로 평가된다. 바흐와 비교될만한 판소리 명창이 바로 '염계달'이다.

염계달은 판소리 중고제의 기초 등 '성음 표준'을 만들었던 인물이다. '도미노 현상'으로 말하면 가장 위에 서 있는 명창이다. 도미노 첫 팻말이 넘어지면 순서대로 쓰러지듯, 거의 대부분 충청도 중고제 명창들이 염계달 명창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만큼 염계달 명창은 중고제의 가장 위, 그러니까 정점에 서있던 인물이다. 중고제뿐만 아니라 판소리 동·서편제를 통틀어도 최고의 국보급이다.

그렇다면 염계달은 어떤 인물일까. 판소리 역사책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노식의 조선창극사(25페이지~28페이지)는 염계달을 이렇게 기록했다. 염계달의 출생지는 경기도 여주군이고, 충북 충주에서 머물며 살았다. 어려서부터 노래와 관련해 '천재' 소리를 들었던 그는 판소리 산 공부를 계획하고 충청도 음성 벽절로 들어가 판소리 공부를 했다.

기록에는 충청도 '음성 벽절'이라고 표현했지만, 충북도 음성군 벽절을 말한다. 벽절은 가파른 산벽 아래를 뜻한다. 조선창극사에서 기록된 벽절은 현재 음성군 가섭산 내, 고려후기 사찰인 가섭사(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말사) 경내 산 아래 절벽으로 추정된다. 음성 가섭사 산 아래 절벽이 염계달의 '득음 장소'로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염계달의 득음장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사찰 스님 등과 국악학계 등이 '득음터'를 추정할 뿐이다.

염계달은 조선시대 전기 8명창에 속한다. 당시 판소리 기량이 가장 뛰어난 명창을 8명창으로 불렀는데, 염계달과 권삼득, 송흥록, 모흥갑 등이 전기 8명창에 속한다. 이후 조선 후기 명창 등으로 구분된다. 그의 출생지는 경기도 여주, 살았던 지역은 충북 충주, 득음장소는 충북 음성으로 기록돼 있다. 경기도 여주는 실제 충북 음성군, 충주시와 인접한 도시다.

당시 여주군은 행정구역상 충북도였다가 경기도로 편입된 지역이다. 염계달은 당시, 충청도 사투리를 구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판소리의 성음인 경드름(경기 지방의 독특한 선율)과 추천목(그네를 타는 듯한 선율) 대목을 창시했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광한루 대목인 '네 그른 내력'이 대표적인 추천목이다. 이 대목의 선율은 고수관제 '자진사랑가'와 비슷하다.

◆'어전광대' 충북 증평·괴산출신 최낭청... '석화제의 달인' 김제철 명창도 괴산군 태생

충북 음성과 진천뿐만 아니라 괴산·증평지역에서도 판소리 명창을 배출했다. 또 괴산에서는 조선 전기 8명 중에서 1명을 길러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따라서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즉 '중부 4군'은 판소리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창극사 47쪽을 보면 '최낭청'이라는 명창이 언급된다. '낭청'은 조선시대 벼슬이름으로서 소리를 잘해서 받은 것이다. 최낭청의 성은 최 씨지만 본명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성과 벼슬만으로 '최낭청'이라 부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송인헌 괴산군수를 '송 군수'로 부르는 식이다.

최낭청의 출생지는 조선창극사에서 '충청도 청안'으로 기록돼 있다. 충청도 청안은 현재의 괴산군 청안면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괴산군 청안면은 당시 증평군과 같은 권역이었다.

청안면은 진천군과 약 2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최낭청과 진천 김봉학 판소리 명창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괴산·증평 명창인 최낭청은 판소리 기량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창극사'를 쓴 정노식은 최낭청을 이렇게 표현했다. '최낭청은 학식과 기량을 모두 겸비한 어전광대였다. 최낭청은 학식이 높았고 소리 또한 뛰어나 임금 눈에 띄었다.'

국악 학자들은 조선 전기 8명창 중 한명이자, '석화제(가야금병창제와 비슷한 창조)의 달인' 김제철 명창도 괴산군 태생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판소리 석화제의 가장 큰 특징은 '경쾌, 화사, 화평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석화제는

전라도 소리보다 충청권 소리에 더 근접하다는 게 노재명 국악학자의 설명이다. 고(故)김영진(청주대 인문학 교수) 전 충북도 문화재위원장은 10여년 전에 김제철의 태생지를 '괴산군 인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충북지역 판소리 명창인 염계달(음성), 최낭청(괴산·증평), 김제철(괴산), 김봉학(진천)은 우리나라 판소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었다. 중고제의 기초 등 '성음 표준'을 만들고, '석화제(가야금병창제와 비슷한 창조)'를 처음 사용했으며 임금 앞에서 소리했던 명창들이 바로 충북의 간판 소리꾼이었다. 그러나 염계달을 제외하면 최낭청, 김제철, 김봉학 3명은 실증 자료가 거의 없어 아쉽게도 판소리 역사에서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이름 석자도 모르는 국악인들이 다수다. 충북 중부 4군(염계달, 최낭청, 김제철, 김봉학)은 이처럼 국악의 성지로 불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전라도 명창들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활발한 추모 사업 등에 비하면 충북의 옛 명창들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돼 초라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충북 명창들은 국악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것은 분명하다.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고수' 청주출신 이창명 명창과 박팔괘

중부 4군 뿐만이 아니다. 청주지역 명창들의 활약도 돋보인다. 무엇보다 국악계에 드러나지 않았던 '청주 명창 발굴사업'이 절실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청주지역 대표적인 소리꾼은 이창운과 박팔괘 명창이다.

박팔괘(1882~1940년) 명창은 학계에서 크게 다룰 만큼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지만, 이창운은 사실 숨은 판소리 고수(高手)인데도, 학계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명창 중 한 명이다. 그에 대한 실증 자료가 부족했지만, 무엇보다 국악계와 자치단체가 손을 댄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국악계와 향토사학자 등이 합동으로 발굴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창운은 어떤 인물일까. 먼저 그는 중고제 판소리 명창이었다.

정노식 저서 '조선창극사'(114~115쪽)에 보면 이창운의 고향은 '충청도 문의'로 기록돼 있다. 이 기록의 지역은 현재 충북 청주시 문의면(옛 청원군)을 말한다. '충청제(忠淸制)'라는 독자적인 산조가락을 만들었던 박팔괘 명인도 충북 청원 출신이다. 당시엔 청원군이었지만 현재는 청주시에 속한다. 이창운과 박팔괘는 같은 고향 선후배 사람이다. 그래서 후배인 박팔괘가 선배 이창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악계의 설명이다.

시대별로 보면 박유전→이날치→이창운→이동백으로 이어진다. 이들의 장기는 '새타령'이다. 이동백과 김창룡이 이창운의 적벽가 중 '새타령'을 방창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동백·김창룡이 선배인 이창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박팔괘는 구한말~일제강점기시대에 활동했던 가야금산조 및 병창 명인이자 중고제 판소리 명창이다. 그의 생년월일은 학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데, 조선

후기에 태어나 광복 이후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팔괘(朴八卦)라는 석자는 예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팔괘의 손자인 박인규 씨가 박팔괘에 대한 교지(임금이 관직 등을 내리는 문서)를 봤다고 한다. 교지에는 정육품(正六品)이라고 적혀있고, 그 아래 박학래(朴學來)라고 기록됐다. 또 광무 8년(1904년) 3월이라고 적혀있었다. 이런 점에서 박팔괘의 본명은 박학래로 봐야 한다는 게 학계의 설명이다.

'박행충'이라는 명창도 충북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2000년대 초반, 전라도 광주지역의 허름한 골동품 상점에서 소리북이 발견되는데, 이 소리북의 원주인은 박행충 것으로 알려졌다. 소리북에는 '충청북도 청주군 청주읍 박행충'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리북이 언제, 어떻게 제작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1931~1946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행충이라는 명창은 국악 관련 고서(古書) 등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국악 가야금 산조의 명인 박팔괘 명인의 친인척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악계의 설명이다. 박행충 역시, 적극적인 발굴사업이 필요해 보인다.

◆국악계 큰 어른 '박팔괘', 말년에 굶어 죽었다…단독 인터뷰 진행

특히 청주출신 박팔괘(1882년~1940년)명인은 명성에 걸맞지 않게 굶어 죽을 만큼 궁핍한 말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팔괘는 또 말년에 우리나라 최고의 명인 대접도 받지 못한 채, 손자의 친구(박만규) 집 사랑방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8월 25일 오후 박팔괘 증손자인 박종덕(54) 씨를 그의 자택인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서 만나, 단독으로 인터뷰했다. 박 씨가 실제 '박팔괘 후손'인지 확인하기 위해 구미로 달려갔고, 박팔괘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했다. 확인 결과 박 씨는 박팔괘의 실제 증손자 였다.

박 씨는 단독인터뷰에서 박팔괘와의 관계 등을 밝혔는데, 그의 인터뷰는 학계의 큰 관심뿐만 아니라 '박팔괘 연구'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박팔괘 후손으로부터 '제적등본'도 단독으로 입수했다. 제적등본에는 박팔괘의 생몰연대가 정확하게 기재됐고, 그의 후손 이름 등 가족들의 가계도도 엿 볼 수 있었다.

박팔괘의 가계도는 '박영춘-박팔괘-박동기-박만규-박종수·박종덕'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국악 학계는 박팔괘의 후손이 존재했는지 등을 80여년 동안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특히 후손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박팔괘 생몰연대' 등도 학계에 정확히 보고되지 않았다. 박팔괘의 일대기 역시,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충북 옛 청원군 출신(현 청주시)이자, '충청제'라는 산조 가락을 만들었던 인물로 알려진 게 박팔괘의 전부였다.

박팔괘 제적등본과 후손에 따르면 박팔괘는 명치 15년, 그러니까 1882년 6월 3일 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에서 태어났다. 박팔괘는 또 소화 20년, 그러니까 1945

년 7월 21일 오전 8시 본적지인 충북 청원군 북일면 외평리 산 67번지(현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다른 지번과 합병)에서 별세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옛 충북 청원군 외평리 인근의 '통새골'에서 별세했다는 게 후손 박 씨의 설명이다.

박팔괘는 '통정대부'라는 직함도 얻었다. 통정대부는 정3품의 상계(上階)다. 통정대부는 당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했는데, 박팔괘도 당시 고위 관료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팔괘는 조선시대 고종, 명성황후와 함께 사진을 촬영했다고 한다. 후손 박씨는 "모친께서 '박팔괘 할아버지는 고종, 명성황후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늘 이야기 했다"며 "고종 등과 촬영한 증조부(박팔괘) 사진, 증조부 인물 사진 등은 여러 번의 이사로 없어져서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피는 속이지 못했다.

후손인 박씨는 현재 베이스기타 연주자 겸 버스 운전업을 하고 있다. 박종수 막내딸인 박소라 씨는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세계 피아노 연주자 반열에 오를 만큼 뛰어난 음악가로 알려져 있다. '국악과 현대음악', 음악 장르는 다르지만 '박팔괘 가문'의 세계적인 음악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최대규모 국악단체 '청풍승평계' 첫 발굴…국악계 역사도 바뀔까.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 제천지역에서 창단한 국악관련 단체는 과연 어떤 조직이었나.

1893년 제천시 청풍면에서 조직된 국악관련 단체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조선말 제천에서 조직된 국악관련 단체가 학계에서 '국악관현악단'으로 인정받는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으로 우뚝 서게 된다. 무엇보다 '철도, 석탄, 시멘트, 잿빛 도시' 등의 부정적인, 즉 삭막한 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제천시는 국악의 고장이나 예술의 고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다. 일단, 취재결과 국내 최정상 국악 지휘자 4명은 '조선말 제천 국악관련 단체가 지금의 국악관현악단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이다.

악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1965년 국악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목적으로 창단된 한국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미주·유럽 등지의 수많은 해외 공연과 340회의 정기공연, 그리고 2000여회의 특별공연을 통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국악관현악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악단의 단원은 40여명이다. 지휘자, 부지휘자, 악기별 수석 단원, 그리고 일반 단원 등으로 구성됐다. 단원들은 가야금과 거문고, 대금, 해금, 소금, 피리, 아쟁, 타악 등을 다룬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보다 72년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단체 혹은 국악관현악단이 존재했었

다.

바로 '청풍승평계'라는 국악관련 단체다. 청풍승평계는 128년 전, 제천시 청풍면에서 창단됐다. 그렇다면 청풍승평계라는 국악관련 단체가 현재의 국악관현악단과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 분석해 봤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먼저 '조직'부터 살펴봤다.

1969년 제천군지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제천군지와 학계에 따르면 1893년 창단된 제천 청풍승평계는 33명의 단원으로 출발했다. 현재의 국립 및 시립 등의 국악관현악단과 비슷한 규모다. 제천 청풍승평계는 수좌와 통집, 교독, 총률 등 현재 국악관현악단의 지휘자와 악장 등처럼 직급도 갖췄다.

수좌는 청풍승평계의 최고령자인데, 지금의 국악단의 단장쯤 된다. 또 통집은 수좌가 정하는데, 악단의 사무 등의 감독 역할을 한다. 지금의 사무국장 지위다. 교독은 기악 등을 가르치고 총감독하는 자리다. 지금의 악단 지휘자 급이다. 총률은 악단 가운데서 최고로 능한 사람을 말한다. 지금의 수석단원쯤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율원이 있는데, 지금의 단원이다. 이처럼 청풍승평계는 수좌(단장)부터 율원(단원)까지 골고루 조직을 갖췄다.

'악기 분포'는 얼마나 닮았을까.

청풍승평계의 악기는 현재의 국악관현악단처럼 다양했다.

청풍승평계의 단원들은 풍류가야(정악 가야금), 산조가야(산조가야금), 양금, 현금(거문고), 당비파(현악·8음), 향비파(현악·8음), 피리(향피리), 젓대(대금), 장고 등을 연주했다. 악기 분포 역시, 현재 국악단과 비슷하다. 특히 가야금 산조와 정악을 구분해 연주한 것으로 봐서 궁중음악이나 민속음악까지 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단원(계원)들은 악보 53장, 506률을 가지고 연주했다. 아쉽게도 악보는 분실되고 없어졌다. 이들이 사용했던 악기 등도 6.25 전쟁 당시, 모두 사라졌다. 단원들 역시, 이때 모두 향리로 흩어졌다.

이번엔 악단의 '규칙' 등도 분석해봤다.

청풍승평계의 규칙도 있었는데, 매우 엄격했다. 현재의 국악관현악단과 비슷한 모양새를 갖췄다.

청풍승평계의 규칙은 1부터 20가지로 구분해 냈다.

단원들의 모임 일자는 매달 16일로 정했다. 모임 시, 단원 가운데 술주정이나 싸움 등의 폐단이 있을 경우 중벌로 다스린다. 젊은 단원이 연장자를 능멸하거나 투쟁할 경우 상벌로 시행한다. 상벌은 3냥, 중벌은 2냥, 하벌은 1냥이다. 조선시대 화폐 1냥은 현재 화폐로 8만원 선이다. 또 모든 단원 중 애경사(哀慶事)가 있으면 부조금을 냈고, 벌칙 등을 위반했을 경우 청풍승평계에서 떠나야 한다는 등의 엄격한 규칙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정기연주로 보여지는 대목도 있다.

청풍승평계 규칙 3항을 보면 매년 춘추에 모든 회원은 '승경한다'라고 돼 있다. 승경이라는 표현은 좋은 경치를 보러가는 것인데, 아마도 뛰어난 경치에서 정기적으로 연

주회를 한 것 아니냐는 게 학계의 설명이다. 현재 국악관현악단의 예산, 사고 시 감봉 및 벌점, 위촉과 해촉, 운영·사업 방향, 1년 정기연주 계획 등의 규칙과 매우 흡사하다.

지난 10월 25일 제천에서 처음으로 이와관련한 학술세미나가 열렸는데, 국악학계는 “최고의 발견”이라며 기뻐했다.

[2-2 토론]

토론문

송은옥
한국문화원연합회

토론주제_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추진방향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에 있어 지방문화원의 역할

송은옥(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 중앙정부는 법정책¹⁾ 및 계획을 통해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도시·문화지구 지정,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은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로 가는 과정의 중요한 매개이자 수단입니다. 이러한 지역문화 정책흐름 안에서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양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각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²⁾ 문화분권, 문화자치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이 아직 과도기적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과 문화자원이 그 지역의 문화생태계의 틀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 중앙정부는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제1~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문화재단 설립, 문화도시 지정사업으로 지역문화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문화자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정부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상향식 문화정책이 지향점이 되겠지만, 단계적으로는 팔길이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지역문화 생태계가 균형잡힐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지방문화원에 대해 역차별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한 지방문화원의 역할도 지역문화정책 핵심 파트너로 들어와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문화원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쾌를 잘 연결시켜 지역에서 혼선이나 중복성이 없도록 방향을 잡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지방문화원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풀뿌리 문화조직입니다. 1947년 강화문화원 개원을 시작으로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국 기초지자체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31개 지방문화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지방문화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해 지역문

1)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비전 2030 등

2)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재정(2021.7.14.). 경기도 문화정책 기본원칙,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수립,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 설치, 경기도 문화정책협의체 구성 운영 등이 포함

화의 균형발전입니다. 주요사업은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등으로 문화 자치를 위한 정체성 확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6월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을 통해 문체부가 지방문화원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2022년 1월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분권, 일상적 문화향유 강조 속 지방문화원 위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소멸, 고유문화 소실 위기에서 지방문화원 역할이 요구된다. ▲국가 및 지자체의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보존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교두보로서 지방문화원의 혁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전담 기관화 ▲지역학 거점 역할 부여 ▲소실 위기 지역 기억저장소 기능 강화 ▲지역 문화 역사교육 분야 역할 강화입니다. 이러한 지원육성계획은 중앙 및 지자체에서 추진동력을 만들어주어야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문체부가 2020년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中 전략 3-1(지역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존)과 전략 3-2(특색있는 지역문화의 미래 자산화)의 세부 사업 중에는 예, 지역학연구소, 지역어보전, 마을구술사양성, 마을기록관조성, 지역콘텐츠 디지털화 등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지방문화원 사업) 제1항 제1조 제2조와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별도의 기관이나 파트너를 만들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문화원이 역량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역기반의 전문성이 갖춰진 지방문화원은 지역학거점으로써 선도적 사례³⁾를 만들어 가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따라 효용가치는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지역문화지역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충분히 고려하여 담아야 할 것입니다.

3) 예,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강원도 춘천의 역사와 문화 정립을 통해 지역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2019년 춘천문화원 내 설립(춘천의 민속문화 아카이브 구축, 학술총서, 근현대 자료DB 구축 등)

- 유사시설과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지방문화원과 가장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지역문화재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사업, 지방문화원 조례의 지원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문화재단 조례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전승과 창작·보급 •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자료수집 및 국내외 교류 • 지역문화행사의 개발 및 개최 •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 전통문화예술 및 문화유산의 발굴·보존 등 활동 지원 • 그 밖에 문화예술시설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례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 영화·음악·무용·미술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문화의집 조례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 지역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lis.go.kr/>

- 지역문화 생태계에서 지방문화원은 오랫동안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2000년대 이후 유사기관(문화재단⁴⁾, 생활문화센터 등)의 등장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에 중요한 문화기반임이 분명하며, 정부의 파트너로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주춧돌로 지역의 고유문화 활용 및 가치확산을 위한 기초거점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끝.

4) 기초문화재단: 시설수(86개), 평균직원수(60.3명), 평균예산(9,303,488천원), 지방문화원: 시설수(231개), 평균직원수(4.2명), 평균예산(718,699천원) *2020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기준 광역 제외)